

'94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결과보고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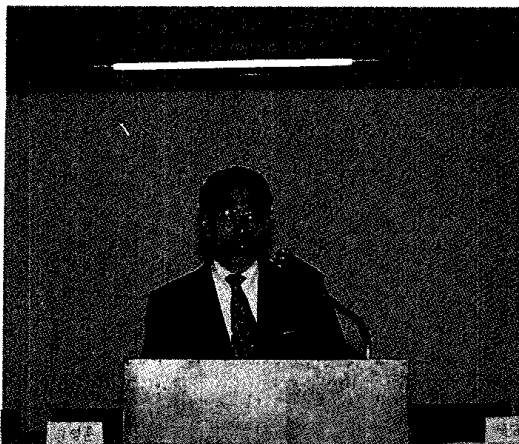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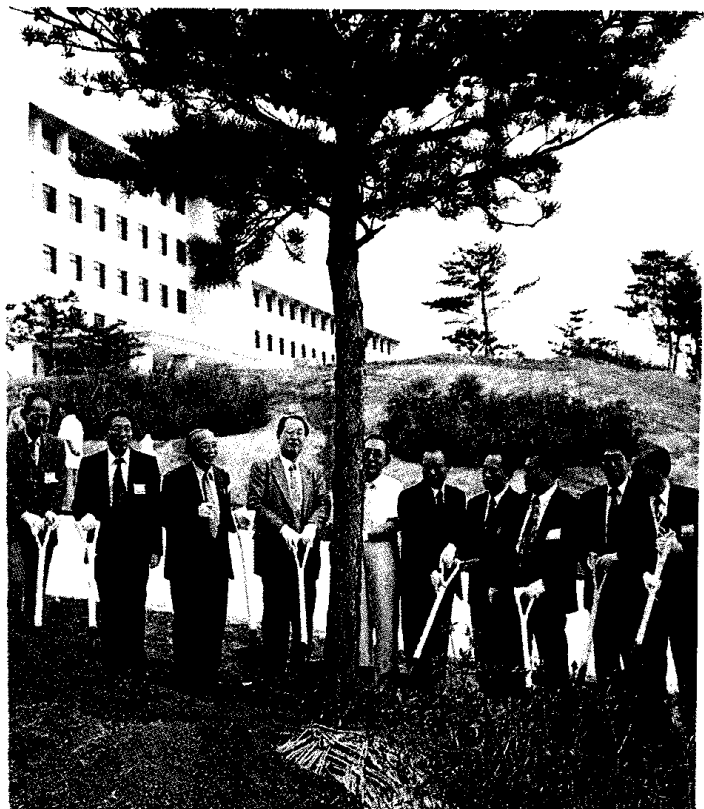
1



2



3



4

1 연변대 대강당에서 제1분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 정석홍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이 통일원 차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3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 총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4 토론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이 연변과학기술대 본관 앞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토론회 이모저모

1 공식참가자를 대표하여 김병섭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미국 서북부지부장이 대학발전기금을 김진경 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 공식 참가자와 연변교육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한 만찬이 끝난후 참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1

3 토론회가 끝난후 10개국에서 모인 공식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展望东北亚和平与繁荣的时代

8.5-8.7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3

차 례

- 개회사 / 2
 - 기초연설 / 8
 - 특별보고 / 14
-

분과별 발제문과 토론내용 / 23

- 제 1분과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 25
 - 제 2분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전망 / 85
 - 제 3분과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제고 방안 / 137
-

종합토론 내용 / 191

- '94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참가자 명단

개 회 사

김 진 경

연변과학기술대총장

동북아의 제일 북쪽인 이곳 연변까지 케냐, 미국,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지도자들께서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이후로 우리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땅은 우리 민족의 슬픈역사를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국 땅에 있는 200만 우리 동포는 우리 슬픈 역사의 피해자들으로써 대부분 조국 땅을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와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고집스럽게도 우리의 문화를 지켜오고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오는, 해외에 있는 가장 자랑스런 우리 한민족입니다.

해외에 있는, 특히 이민역사가 짧은 미국의 우리 2세대들은 우리 말을 잘 할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우리의 언어를 보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들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곳 동포들은 조국에 있는 국민들이 도와주고 안아주고 협력해 주어야할 대상인데, 분단으로 인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덕택에 50여 소수민족과 함

께 한마음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이 모여사는 가운데서 우리 조선족이 그중에도 가장 교육열이 높고 가장 멋있게 살고 가장 자기의 문화를 잘 보존하며 살고있는 민족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더 좁혀 말하면 이제 동북아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동북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이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은 “과거의 바다는 지중해였고, 현재의 바다는 대서양이지만 내일의 바다는 태평양일 것이다. 21세기는 분명히 아시아의 세계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세계가 도래했을 때 동북아시아가 21세기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의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과 한국과 중국입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부조를 하면 참으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 세나라가 협력을 하면 아마 구주공동체나 미주연합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나라가 연합하면 기술, 인력자원, 지하자원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동북아의 국가들에게는 오늘날의 세계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던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자산은 자본이나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대로 인류문화사의 심오한 지식 즉, 공자, 맹자, 장자 등 철학이 중국을 중심으로해서 일어났고 오늘의 과학기술은 일본, 한국 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동북아 3국이 21세기 새로운 정보사회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분단국이지만 반도체에 있어서는 당

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구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과학면에서도 우리민족이 이 역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 부각될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시대는 지나가고 인류가 지구촌을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공동의 목표는 영토확장이나,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다른사람이나 국가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이룩하고 문화적인 만족을 얻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의 주제가대로 인류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내일의 인류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모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이념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상논쟁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금번에 우연히 북한주석 김일성의 장례식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불원한 장래에 한민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민족이 내일을 향한 역사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를 논합니다만, 단순히 물질적인 경제논리로서는 오늘 인류사회가 발전될 수도 없고 인류들이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21세기의 경제논리에는 경제철학이 있어야 하며, 경제에 대한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때는 한 정권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때는 한 국가의 욕구를 위해서 전쟁과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이런 원리하에서 약한자는 강한자에게 먹히는 시대를 인류는 살아왔으며, 오늘도 인류역사는 많은 주의와 많은 이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즘도 어느 주의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 인류에게는 이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와같은 정신적인 어떤 주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조금 환상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인류가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주의를 사랑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랑주의만이 인류가 행복하게 지구촌가족을 이루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사회의 지도자들로써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20여년전 까지만 해도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4천년 역사속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민족에게는 한번도 허허 웃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 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의 반쪽, 남한만이라도 배고픔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4천여년 동안 우리왕조가 중국천제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이제 4천여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지금 분명히 중국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본, 기술,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 조그마한 우리한국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민족이 들어가는 곳마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의 주인공역할은 자본과 기술이 앞선 일본이 하지 않겠

는가?”

물론 크게보면 동북아시아가 21세기의 주인공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중 핵심적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일본물건은 좋아 하지만, 일본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류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인류문화에 주인공이 되려면 존경을 받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계 어느나라를 가든지 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허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존경합니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서방세계는 미워해도 한국은 존경한다고 들었습니다. 회교국가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여기 케냐에서 오신분도 계시지만, 우리민족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고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1960년대에 구라과에 유학갔을 때에는 한국사람이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불과 20여년동안 이 나라가 4천여년 역사속에서 이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 많은 세계의 민족과 국가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나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한없는 자부심을 가져야되고 이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땅을 다녀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못난 조상을 두었기에 우리의 역사가 이와같은 역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21세기 무렵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남쪽, 북쪽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다

는 사실을 느끼게 될때 순간순간 참담해 집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민족과 조국을 사랑해서 오늘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여러분의 심포지움속에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의 재발견, 찬란했던 우리 민족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뜨고 내일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제 앞을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내일의 세계는 아니 오늘의 세계는 너무나도 급하게 변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3등민족으로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위대한 민족을,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쏟는 우리의 정열과 정성이, 우리의 피와 땀이, 우리의 지혜가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중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연 설

송 영 대
통일원 차관

오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포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먼길을 마다 않으시고 세계각지 10여 개 나라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변 해외연의회 김영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에는 벌써 4번째로 세계 각지에 뿌리를 내린 우리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의 통일과 장래문제에 관하여 슬기를 모아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참으로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 연변은 일체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암울한 시기에 항일독립운동의 선구자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던 유서깊은 땅으로서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제2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통일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그 역사적 의의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석 김일성이 사망하여 앞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근 반세기동안 그들 체제를 이끌어왔던 김일성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 지도체제를 누가 이끌지 보다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지향할 정책노선은 무엇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남쪽에서는 작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새로운 체제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는 북한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냉전시대의 대결구조를 청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과감하게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새 체제하에서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해 나가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개된다면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물결이 한반도에도 분명 밀어닥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는 동서 양 진영의 대결구조를 무너뜨리고 바야흐로 개방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가 없으며 남북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동서 화해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은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누가 누구를 타도하고, 먹는 그런 혁명이나 흡수가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이 우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 관계를 도모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단계 접근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상호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의 장을 열어 가는 화해·협력단계

둘째,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남북이 동반자로서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남북 연합단계

셋째, 1민족 1국가의 정치통합을 이루어 마침내 하나의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로의 진입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남북간의 이미 합의된 사항을 제쳐놓고 다른 주장을 하는 태도는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참다운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이행하고 역사적 조류와 민족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대화와 개방, 변화와 개혁에의 길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점차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 최근 들어와 합영법 시행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점차 개방

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현실적 문제의 우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개방·개혁을 외면하면서 김주석 사망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다짐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남 혁명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주석직을 비롯한 권력승계의 향방과 새 지도체제의 대내외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 체제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일성주석 사망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상황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6월 28일 예비접촉을 통해 평양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망으로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일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핵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핵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분명한 목표와 원칙, 그리고 추진전략을 갖고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안되고 동북아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핵문제는 IAEA 사찰과 함께 남북 당사자 해결의 원칙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침 제네바에서는 미·북한 3단계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대화과 미·북한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통일된 조국』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는 바로 민족통일의 완성이며, 온 겨레가 다같이 동참해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7천만 우리 동포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번영된

민족의 장래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해외동포 여러분들은 이 통일과정에서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이 늘 성원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잘못을 나무래 주시면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평화적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사는 모든 동포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현황과 향후 발전전망

김 영 만*

이곳 연변에서 국제적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과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오신 대표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단하게 연변정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변 땅은 우리 조선동포들의 눈물젖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 연변조선족들이 피흘리며 일본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곳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동포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곳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을 주체로하여 구역자치를 하는 곳으로써 총면적은 42,700km²입니다.

자치주에는 조선족, 만족, 회족, 한족 등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 조선족 동포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6개시와 2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개시는 연길시, 도문시, 훈춘시, 용정시, 화룡시, 돈화시이며, 2개현을 왕청현, 안도현입니다.

6개시 2개현안에는, 한국으로 말하면 읍에 해당하는 47개 진과 52개향, 24개 도시사무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변의 정황을 개관해서 소개하면 이런 몇개의 특징을 말할 수

* 연변조선족자치주 해외연의회 회장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볼때 연변은 우리 조선 독립투사들이 활동하던 곳이며 항일투쟁의 근거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60년대에 한반도 북부에 연속재해가 들어서 많은 조선난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여기 연변에 정착해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한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은 연변을 무대로 삼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일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연변에는 우리 한국 인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반일투쟁의 주요한 역량은 역시 우리 조선민족이었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는 우리 조선동포들이 조선독립투쟁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워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세계를 진동시킨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21년 중국에는 공산당이 탄생하였습니다. 공산당이 탄생된 이후에도 중국의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은 계속 항일투쟁을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투쟁의 한 부분으로써 연변의 항일투쟁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연변의 조선동포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중국 동북지방의 항일투쟁 중 희생된 사람으로써 열사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2,726명입니다. 이 2,726명 중 절대다수가 조선동포였습니다.

2차세계대전후에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서 다른 소수 민족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변의 인구는 100만이 못되었습니다. 다섯 가구에 한 사람이 입대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희생된 우리 조선동포들이 2,912명입니다. 이리하여 연변은 어디가나 항일 열사비를 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한 시인이 연변에 와서 “산골마다 진달래
꽃이 피고 마을마다 열사비가 있구나”이런 시구절을 쓴 적이 있습
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정에서 우리 조선동포들의 기여도를 중국
의 여러 소수민족들도 모두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과관
계 때문에 연변의 조선족이 자치정부를 건립·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특징은 연변은 소수민족 자치지구입니다. 연변은 조선족,
만족, 회족, 한족 등 기타 민족이 모여 하나의 민족지구를 형성하
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두만강변에서 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였습
니다. 때문에 도문, 훈춘, 화룡, 용정, 연길시 인구의 절반이상을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돈화, 안도, 왕청은 한족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조선족이 82만명됩니다.

연변의 조선족은 한족, 만족, 회족 등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반
대했으며, 또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이 지방을 건설하는 가운데서
두터운 우의를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친형제와 같은 민족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변은 물론 중국 각지에서는 민족
인구의 다과, 경제수준 고저를 따지지 않고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
고 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민족지간에 단결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민족진보가 빠른 지방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자치
정부가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이곳은 조선족자치주이기 때문에 자치주 정부의 주요책임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요책임자는 꼭 조선족이 담당하여야
하며 자치주 정부 구성원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조
선사람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비록 조선족의 인구는 100분의 40이지만 자치정부 구성원,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 가운데서 조선족이 꼭 절반이상을 차지

하여야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각급기관의 지도자중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현 급의 지도자중의 비율 50%, 자치주의 1급 지도자중 비율은 64.7%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주의 권한은 경제 방면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치주내 모든 자원과 공장기업은 주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자치주정부 산하에 있는 어느 기업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자치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화·교육방면에서 연변의 조선족들은 고유문자와 언어를 지키며 교육의 발전과 문화의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30개 자치주 가운데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강택민 총비서가 연변을 시찰할 때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전국에서 모범자치주로 건설하자”란 격문을 썼는데, 이것은 중앙당에서 우리 조선족에게 신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연변을 전국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민족이 단결하고, 문화가 번영된 모범자치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변의 특징은 변방지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북한·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훈춘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이 울면 3개 나라가 다들을 수 있다는 곳입니다.

자치주내의 국경선의 총 길이는 755.2km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과의 접경길이는 522.5km, 러시아와의 접경길이는 232.7km입니다.

이 지리적 특성은 연변의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이 작년엔 4억 3천만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90년에 비해서 5.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변에 와서 독

자 혹은 합자경영하는 기업이 485개에 달했습니다. 훈춘시는 중앙급 개발구로 중앙정부가 기준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특구와 같은 정책을 실시합니다. UN에서 국제 개발 기점으로서 훈춘을 정하고 각 방면의 준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춘지구는 지금 홍콩과 같은 국제무역 금융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것이 우리 연변의 대외개방사업 가운데 주요한 과업으로 삼고 각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의 자르비노 항구를 이용해서 한국의 속초와 연결되는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단계로 10월 경에 한국의 속초로부터 화물이 러시아의 자르비노 항구에 도달하면 거기서 훈춘과 40여km 떨어져있는 장영자를 통하여 훈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연변으로 오는 거리가 매우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훈춘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 개발사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변의 세번째 특징입니다.

네번째 특징은 연변은 자원이 풍부하여 공업발전에 아주 유리한 지방입니다. 연변의 자원은 산림자원, 광산자원, 수력자원, 특산물 자원, 관광자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73%에 달하며 3억 2천 6백만 m^3 의 목재 축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자원은 50여종에 달하는 금속광물과 40여종에 달하는 비금속광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석탄은 1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석유매장량은 1억톤에 달합니다. 우리 연길시에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는 487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수력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463종의 야생경제식물이 있는데 그중에 약물로 쓸 수 있는 식물이 875종이나 됩니다.

사슴, 범, 곰, 수달피 등 250여종에 달하는 진귀한 야생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과배, 담배, 아마 등 특산물도 많습니다.

백두산 천지폭포는 해외관광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변에는 매년 관광객들이 6~7만명에 달합니다. 연변에서는 이런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공업·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변은 산림, 펄프, 담배, 방직, 석탄, 전력, 야금, 기계, 전자, 건축재료, 식료품 등 공업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변 담배공장, 화학섬유공장, 석현펄프공장, 연변석유화학공장 등 국영기업을 비롯하여 1600여개의 기업소가 있습니다. 공업 총생산액은 64억위안(元)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에 우리 연변은 기타지방과 마찬가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변은 교통이 비교적 발달했습니다. 어느 현든지 기차가 통하고 어느 마을든지 자동차가 통합니다. 얼마전에 훈춘에는 철도가 통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도문에서 훈춘까지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훈춘에서 러시아 국경선까지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그렇게되면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연변의 농업생산은 우리 조선족이 많아서 벼, 콩, 조, 옥수수 등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외 담배, 과일농사가 증대되고 있는데, 농업생산액은 28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변의 시장은 아주 활발합니다. 상품유통액은 이미 44억위안(元)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연변은 교육과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 조선족들 가운데는 “빌어먹어도 아이들은 공부시켜야 한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백성들의 이런 노력으로서 우리 연변의 교육은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유아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민족교육체제가 형성 되었습니다. 연변에는 5개 대학교, 7개소의 성인 대학교, 9개소의 중등전업학교, 64개소의 직업중학교

와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총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전성의 평균 숫자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연변에서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일반화 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인들이 연변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역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예술사업은 매우 활발합니다. 우리 조선족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발전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을 위시해서 문예단체가 10여개 있습니다. 연변가무단은 「심청전」, 「춘향전」을 전국 문예행사와 해외에까지 선보였습니다. 연변의 문화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요 며칠전에 중국 문화부에서 전국 변경문화 사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모범문화자치주로 표창했습니다.

연변의 위생사업도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지금 각종 위생기관이 786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금병원이 55개나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원은 1만 4,000여명에 달합니다. 인구당의 해당되는 의사숫자는 전국 전성의 평균 숫자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연변의 정황을 5개특징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연변의 이런 역사발전과 현실의 이런 사실은 중국의 개방, 개혁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민족정책이 영명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은 중국 당국의 이런 올바른 민족 정책의 혜택으로 우리 조선족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계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55개 소수민족 가운데서 연변과 중국의 조선족은 어느 분야에서나 다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약 600만명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중국에 약 2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우리 동포들을 많이 접촉해 봤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생활에 대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적응성이 강하고, 문화수준이 발달하고, 아주 근면하고, 지혜로워서 그 나라에서 생활수준이 그 나라의 평균수준을 다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매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선족은 어디가나 다 잘 산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연변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물질문화 생활수준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보다 못하지만 정치적으로 민족문화 교육을 발전시키고 자기 민족고유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어느나라에 있는 조선족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비록 역사적으로 놓고 말할때 눈물젖은 역사였지만 피를 흘리면서 일본과 싸웠고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어 한 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세기는 이제 곧 끝나게 되고 21세기를 맞이합니다. 21세기는 모두 “아시아 시대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대, 여기에서 제가 느끼건데 아마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사적사명을 질 국가는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강대국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낙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2050년 좌우에 가게 되면 중국은 확실히 세계에서 강대한 국가로 될 것입니다. 이때 중국은 아시아에 대해서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진보에 대해서 커다란 공헌을 할 것입니다.

중국 민족은 역사적으로 세계 문명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 근 100여년 전에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중국은 낙후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잠을 깨고 미래를 향해서 용맹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이 세계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변의 조선족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아래 계속 대외개방과 대내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연변을 더욱 문명하고 더욱 아름다운 지방으로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훈춘지구가 개발되어서 국제도시로 변하면 연변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고 민족이 단결되며 변강이 공고화되어 세계각국의 왕래가 빈번하는 국제적 경제문화의 중심의 하나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포부이며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꼭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분과별 발제문과 토론내용

제 1 분과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발제/ I 제성호(한국, 민족통일연구원 연구
위원)

II 김영훈(미국, 미안보협의회 한국안
보문제 책임연구위원)

토론/ 한원구(미국, E.S.A.엔지니어링코
리아사 대표)

김병섭(미국, 일천만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 미국 서북부지부장)

민병진(브라질, 조선일보 남미지사
장)

박찬웅(캐나다, 전토론토한인회장)

주경화(중국, 연변일보 부주필)

사회/ 정석홍(한국, 통일원 남북회담사무
국 자문위원)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제 성 호*

I. 서론 : 신국제질서의 특징

과란만장한 20세기가 마지막 6년을 남겨 두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한세기를 되돌아 보고 슬기와 예지로써 대망의 21세기를 설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100년을 준비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구소련의 해체, 동구 공산권의 붕괴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바와 같이 냉전적인 이념의 대결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다.

구소련 해체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국제질서의 일반적 특징(국제정세의 일반적 추세)으로는 첫째,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범세계적인 화해·협력의 추구 둘째,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현상의 가속화 셋째,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시 현상, 즉 국제질서가 정치·군사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고위정치 (high politics)로부터 경제관계가 주요 내용이 되는 하위정치(low politics)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의 출현 넷째,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다섯째, 국내 문제의 비중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국제질서의 일반적 추세가 동북아에 미치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및 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수원대 조교수 역임

는 영향, 특히 작금 동북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변영의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나아가 남북통일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로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평화정착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II.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세

1.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 변화

동서간 긴장완화와 공존, 전세계적 차원의 화해협력추세의 새로운 국제질서 전개를 배경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도 중·러 관계 정상화, 한·러 수교, 한·중 수교,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기본합의서』 도출 등으로 탈냉전적 양자관계가 재조정되고 있고, 다자간 협력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에서도 한편으로는 평화와 변영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와 갈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은 무엇보다도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하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에서는 첫째,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둘째,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어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셋째, 한반도 분단 지속 등 냉전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히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문제에 관해서 주목하면, 한마디로 말해 현재 동북아에서 미·러의 독점적 영향력 감소와 일·중의 영향력 확대 현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미국은 세계정세의 긴장완화, 국내경제력의 약화 등으로 아·태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축소를 포함한 전략적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기존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냉전이후시대에도 동북아지역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PKO 법안 통과후 자위대의 해외 파병,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전보장기구 설치 주장 등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기존 정치·군사·경제 관계 조정, 지역열강으로서 중국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이후 개혁·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융통성 있는 '실용주의 외교'와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증대,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이후 국내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적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의 기존관계 유지 및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상당기간 유지·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일본,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러시

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제(APEC)와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태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2. 남북관계 현황 및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가. 남북관계 현황

세계적인 탈냉전, 탈이념의 영향으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도 화해와 해빙의 무드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민족에게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함)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라 함)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반목과 불신에서 벗어나 화해 공존관계를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합의문건을 채택하고, 12개의 협의 이행기구를 구성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앞두고 있었으나,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돌출변수로 등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3년 2월 25일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정부는 공

존공영의 기조에 따라 남북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NPT탈퇴 선언후 북한은 'NPT 탈퇴유보'라는 특수상황을 구실로 대미 일괄타결론을 내세워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하는 '지연전술'로 일관하여 왔으나,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조속히 정권안정을 이룩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 대미·일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어떤 형태로든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년 6월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한국에 간접 제의한 이래 북한 핵문제는 다시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를 한국이 즉각 수락하고 한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6월 28일 남북한의 정상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들간에 예비접촉이 개최되었고, 7월 25~27일간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합의된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으나, 북한체제 유지 및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개최시기가 문제될 뿐 북한의 내부 체제가 정비되면 남북한이 다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북한은 현재 극심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은 생전에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미·일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였는 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로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김일성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정일의 북한은 당분간 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 ② 통제된 개방정책 추진, ③ 대미·일 관계개선 모색 등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의 적응, ④ 이중적 대남전략 추진 등 기존의 김일성 노선 및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권유지와 체제 정당화를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개혁 개방이 경제의 시장화 뿐만 아니라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하여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대외개방 파급효과를 극소화시켜 체제유지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의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미·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과의 대등한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대남 관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유지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대남관계에서는 남북공존을 모색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통일3원칙’을 주한미군 철수, 군축 우선 실시, 보안법 철폐, 창구다원화, 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대남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일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려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으나, 당분간 체제유지 보전에 제일의 국가목표를 둘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제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북

한의 대남전략의 포기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난 및 국제적 고립 심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화 명분 강화 필요성, 남북한 국력격차 확대 등은 북한의 '개방확대'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1. 역내국가의 정세 및 상호 역학관계의 안정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 역내국가들의 국내정세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역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 및 개혁, 개방 노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김일성 사망과 권력승계로 인한 북한내부의 동요가 신속히 수습되고 하루빨리 북한에서 안정된 정권이 출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일본의 국내정세 불안도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한편 앞으로의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역내국가들은 각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동으로 번영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대세라 하겠다. 결국 동북아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내 불안정요인(이에 관해서는 후술 참조)을 최소화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쌍무적인 역학관계를 안정된 관계로 정립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역내국가들의 국내정세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안정되어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다고 하

겠다.

2. 한반도의 평화정책

가. 한반도 비핵화문제 해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를 긴장과 불안정의 상태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동 문제의 해결은 지금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핵투명성의 확보, 즉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함으로써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가지 차원의 과제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NPT의 당사국으로서 IAEA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인, IAEA의 전면적인 사찰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및 장래(여기서 장래의 북한 핵문제라 함은 영변에 새로이 건설중인 50메가와트 원자로 및 태천에 건설중인 200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통한 핵투명성 확보를 말함)에 있어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하고, 둘째는 1992년 5월 IAEA에 의해 최초 사찰을 받기 이전에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양은 얼마인가 등 이른바 북한의 핵과거를 밝히고 동시에 그러한 핵물질과 관련 핵시설(여기에는 북한이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영변의 2개시설 포함)을 국제적 관리와 통제하에 둘 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첫째 열쇠는 북

한이 금년 5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수거한 8,010개의 핵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원자로에 새로운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사찰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관련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조기에 ‘상호사찰규정’을 마련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찰을 성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쌍방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후자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인 바,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 내지 한반도비핵화문제를 일시에 또는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단계적인 동시에 완전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 즉, 먼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동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핵과거를 규명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과 IAEA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이와 병행하여 또는 추후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남북관계 개선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개막

(1)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

그간 반세기 동안의 남북분단, 6.25전쟁, 반목 대결관계, 그리고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감안할 때 남북한 정상의 만남은 남북분단사에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상징성 외에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상호 신뢰와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민족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한편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대내외에 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평화선언』(가칭)을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정상은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7천만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함으로써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냉전구조의 잔재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화해협력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 또는 전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화해협력은 단순히 남북한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영과 공리의 동반자가 됨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이질화된 민족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긴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미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화해협력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실천하는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민족의 슬기와 예지를 발휘하여 정상회담이라는 만남의 장을 핵문제,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 통일방안 협의결정문제 등을 포함한 남북간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이고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오늘날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이나 파괴적, 폭력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의 조성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서 먼저 남북한 정부인사들은 물론 일반주민들이 접촉과 교류(교통)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민이 꾸준히 서로 왕래하고 물자를 교류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룩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반세기간 단절되어 온 인적 교류, 특히 분단고통의 상징이요 민족의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장 체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에 맞추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경제교류협력이 갖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남북한이 물자교역과 경험을 추진할 경우, 이것은 반세기 동안 극도로 이질화된 민족구성원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사회·문

화·경제 공동체를 형성케 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화될 것이며, 동시에 민족 공동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주변 4국은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전략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발발 등 지역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긴장완화는 주변 4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주변 4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불신과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해협력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정치적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그와 병행하여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남북간에 진정한 불가침 및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간 평화제도화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남북한이 당사자문제에 관해 아직까지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이유로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남북한이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이고 한국도 엄연히 한국휴전협정의 법적·실질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해결원칙에 의거하여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에 기본적인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먼저 당사자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남북간 평화상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 그 자체 보다 남북한간에 평화체제 수립 및 보장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의 객관적 확인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스스로 그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중·러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보장조약 체결을 추진하거나, 또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문제에 관한 소위 2+2의 4자회담이나 2+4의 6자회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 구축만이 아니라 남북통일의 기반조성차원에서 남북간 군비축소와 동북아지역 차원의 군비통제를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개혁·개방 및 대미·일관계 개선

지금 북한경제는 90년 이래 작년말까지 계속해서 4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듯이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아니 거의 파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서방세계의 국제공조체제 유지 등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 특히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작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과 금년도의 김일성 신년사 등에서 경제분야에서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의 개방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그들 체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우려하여 비록 '제한된 개방'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신중하게 개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물론 북한이 현재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은 탈냉전시대의 대세라고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앞으로 계속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체제 유지와 고립화의 길을 걷는다면, 이것은 한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함은 물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동북아의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은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권고하고, 북한이 동북아지역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복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도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진실로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함께 주변 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특히 북한의 대미·일 수교가 한반도 평화공존 및 동북아 평화정착의 제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간 관계개선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미간 협상의 진전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극한적인 대결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북·미간 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북·미 관계 개선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경수로 지원과 같은 현안문제를 포함하여 북·미간 경제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교섭도 북한 핵문제, 식민지 배상문제,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은혜라는 일본여자의 송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는데, 북·미간 핵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본도 북한과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일수교협상이 재개되면, 이에 따라 대북경제교류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 대미·일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모색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한 기초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지역의 역내차원에서 다자간 안보·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주로 동북아 안보협력문제에 관해서만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냉전과 탈이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에서는 역내 불안정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첫째, 영토분쟁문제로서 일·러간 북방영토 문제, 한·일간 독도영유권 문제, 중·일간 센가꾸(尖閣)열도 문제, 한·중·일간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의 대륙붕경계획정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군비경쟁문제로서 일본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역내 국가간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현재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듯이 비핵국가인 일본·한국·북한·대만 가운데 어느 일국이 핵무장을 기도할 경우, 이

것은 여타 국가의 핵무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분단국 문제로서 남북한관계와 중·대만관계(다만 중국은 중·대만관계를 양안관계로 보고 있고 분단국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가 현재 평화적 대화와 기능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통일원칙과 통일방식에 있어서 그들간에 기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신국제질서는 언제든지 다시 강대국간 세력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띠고 있고, 또한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동북아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상되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의 메카니즘’ 창설의 필요성을 점차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문제에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아·태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안보공동체(regional security community)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아·태지역의 군비경쟁, 북한 핵문제 등 안보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도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미·일 등 특정국이 주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의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 협의체를 통해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균형자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등에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쌍무적 동맹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보조장치로서 평가하고 있는 바, 쌍무적 동맹체제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견지하고 역내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구상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V. 맺는 말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의 역내국가들의 국내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특히 아직까지도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남아 있고 적대적 대결과 긴장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함께 남북한이 그동안의 누적된 뿌리깊은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해 나갈 때, 이것은 비단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 및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내재적인 여건과 함께 주변 국제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통일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한민족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때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김 영 훈*

I. 서 론

본 대회와 대주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희구하는 우리들의 염원이 담겨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45년 이래 자의든 타의든간에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갈등과 한으로 응어리져 있는 단일민족으로써 한 피를 나누는 배달겨레인 우리들에게는 같은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그 류가 전혀 다른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실현해 보려는 열정과 희구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반세기 동안을 경과하면서 그렇게도 많은 평화, 통일, 번영을 기원하는 말이나(회담·대화·성명 그리고 기도까지 합쳐서) 노력이 줄기차게 있었지만 남과 북은 원망, 비난, 불신, 위협같은 부정적인 것들만 늘렸을 뿐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의 세계가 ‘지구촌화’(globalization)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세계질서’(the new world order)로 옮겨가는 까닭에 지리적인 개념으로써의 ‘동북아’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위치로써의 동북아는 동양문화권이라는 것 그리

* 미국, 미안보협의회 한국안보문제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신학대학원졸업, 미국웨슬리대학원 수료,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

고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써의 동북아 공동운명체라는 점에서 본 주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I. 신국제질서와 동북아

‘신국제질서’라는 말은 ‘새 세계질서’(the new world order)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써 애기된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한 틀에서 그 시대를 달리할 때에 표현되는 말이다.

물론 구세계질서의 시종은 1848년에 있었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새로운 사상(그 당시의 역사적 현상에서)의 출발로부터 1917년의 레닌혁명을 거쳐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공산주의사상의 수출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이후 냉전구도가 형성되고 팽창하다가 자본주의경제체제에 손들고 자체 해산해 버린 1987년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를 말하게 되고,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1991년에 신세계질서를 선언한 것을 시발점으로 구질서와 신질서의 구분을 하게 된다.¹⁾

오늘날 흔히 말하는 ‘냉전시대 이후’라든가, ‘탈냉전시대’라든가, ‘후냉전시대’라는 말은 모두 냉전체제의 두 주역중의 하나였던 소련의 해체이후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위 ‘국제환경의 변화’라는 말을 하게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고착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 탈냉전시대의 질서와 특징

1) Eregory D. Foster같은 학자는 실제로 1947년에서 부터 1989년까지의 이념제도에 의한 질서의 형성기간을 ‘구세계질서’라고 말한다.
E. D. Foster, *In Search of A Post-Cold War Security Structur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cNair Paper 27, p.14.

냉전시대의 종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구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체제로써의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의 물결이 첨단공학의 산물인 전자산업사회화의 기운을 타고 지구촌을 형성해 감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금년초에 미국이 주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고 남미, 아시아, 유럽전역에까지 번져 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의 외교국방연구소 부소장인 홈즈박사는 주로 냉전이후의 특징을 세가지로 들었는데, 그 첫째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발흥이 심각해지고 있고, 둘째는 신공산주의(neo-communism)의 출현이 구체화되고 있고, 셋째는 이슬람교의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소위 민족주의의 발흥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각각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했고, 과연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남아공화국의 변화를 포함하여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민족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도 민족주의의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는 30여 개국 이상이 되고 있다.

다음의 <표 1>에서 잠시 살펴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 민족주의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국가

동구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서구유럽	남아메리카
조지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아랍-이스라엘	스페인	아이티
아르메니아	지부티	인도	엘	영국	
아제르바이잔	소말리아	버마	이라크		
보스니아	차드	방글라데시	터키		
몰도바	니제르	스리랑카	레바논		
타지크스탄	리베리아	인도네시아	모로코		
	앙골라	필리핀	서부사하라		
	남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아			
	부룬디				
	르완다				

그런데 이 민족분쟁은 사실상 이념갈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민족간의 분쟁은 역사와 전통상 오랜기간동안 쌓여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복잡미묘한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인종문제를 포함하여 종교적 분리주의, 마찰, 분파, 부족·소수민족·토착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복잡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된 신공산주의의 출현 역시 예상된 순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특히 동구권에서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소위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출현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지리노브스키²⁾ 같은 극좌

2) 지리노브스키(vladimir zhirinovsky). 1946년 4월 25일 almaty 출생. 모스크바대학의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했고 특히 불어, 독일어, 영어, 터어기를 구사할 줄 아는 언어통이기도 하다.

적인 정치인은 원색적인 발언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회복을 강도높게 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쨌든 신공산주의자들은 서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liberalism)에 입각한 ‘민주’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개혁의 입장을 취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³⁾.

중국도 역시 경제개혁을 위한 전략 또는 전술로써 ‘제트(Z)식’개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주의적인 행위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신의 계시에 의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냉전구도에서의 두 초강대국(two superpowers)에 항거하기 위한 ‘제3세계’(the third world power)를 형성하려하는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출현은 1978년의 이란혁명(iranian revolution)에서 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상과 같은 모든 상황은 역학관계로 볼 때 구소련과 미국의 양극체제에서 유일 초강국(sole superpower)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미국과 소련 구도, 서구진영과 동구진영의 구도, 민주진영과 독재진영의 구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도가 사라지고 비이념적(non-ideological)이며 비군사적인(non-military)입장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책임부담이 무척이나 커지고 산발적인 경찰역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한가지 재미있는 결론은 구세계질서에서 절반의 힘을 가졌던 소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커져야 할 미국의 힘은 그대로 있고 책임부담만 더 늘어났다는 아이러니칼한 사실이다.

3) 러시아의 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앞장선 게나디 जु가노프(gennady zyuganov)는 서구의 자유사상은 “러시아인의 정신상태를 망가뜨리는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2. 한반도와 주변정세

한반도 주변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두 나라는 일본과 중국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후로부터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냉전체제가 끝나고 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상당한 정도로 국제정치에서 보조를 맞추어 온 것은 사실이나 문자 그대로 미국이 군사대국이었다면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패전 이후 자위대만 길러 온 것이 사실이지만 UN의 회원국으로써 평화유지군을 양성한다는 명분아래 새로운 군사대국으로 자랄 가능성 때문에 한 때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제2의 태평양전쟁 발발을 예고하기까지 했었다. 물론 일본의 1년 국방예산은 미국의 약 3,200억불에 비하면 약 1/10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한국에 비하면 3배이상이나 되고 있어서 새로운 위협적 존재로 부상하기도 했었다.

특히 전후세대를 오랫동안 관리해 온 자민당세력이 물러가고 잠시 개혁세력인 호소가와 연정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좌초되었으며 오랫동안 헌법개정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노선을 띤 사회당의 도이치 무라야마(村山)내각이 들어서자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그의 기본정책노선은 첫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며, 둘째 일본헌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위대를 유지하고, 셋째 비무장의 이념을 원칙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안보정책을 내어 놓음으로써 자민당이나 사민당 자신들이 놀랄 정도로 지극히 온건노선을 견고 있음을 확인케 하였다. 이것은 전수방위정책⁴⁾을 견지하겠다는 온건주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핵의 위협은 미국에게 맡기고 재래식 위협은 자위대가 처리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물론 가장 큰 위협적 존재인 소련이 소멸했고 현 러시아는 공격능력이 없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북한이 새로운 핵보유가능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1, 2호의 실험 성공으로 인하여 일본의 우려는 실로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한국을 36년간 강점하고 수탈과 약탈을 자행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38선을 가르도록 원인을 만들어 놓았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38선(물론 휴전선이지만)을 없애는 데 주요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우리 남한쪽과는 싫든 좋든 배상문제가 끝났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도 안됐고 동시에 배상문제도 정리 안된 상태라 한다면 일본은 한국과 미국과의 긴밀한 의논과 협조 아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역할인데 오늘날 중국은 실로 무시못할 큰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960만㎢의 광대한 지역에 13억이라는 엄청난 인적자원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수산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로 실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천안문사태라고 하는 민주화투쟁에 따른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덩소평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 후 부시가 4월에 덩소평을 방문했을 때 부시대통령은 “개방과 민주화”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덩소평은 “나도 미국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발전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개혁·개방할 터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 천안문사태가 태동하였다. 그리고 6월 중순경에 사태는 가라앉고 덩소평은 전국인민대회에서 “올 것이 온 것이니 너무 동요하지 말라. 이

만한 정도로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중국은 매년 9%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1992년에는 GNP가 12.8%, 1993년에는 13%나 성장했다.

그들은 국민개인소득이 370달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1,680달러와 2,040달러로 계산했다. 이것은 평균으로 계산해도 13억 인구 1인당 1,860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인 것이다.

중국은 연간 방위비가 180억달러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905억달러 (약 5.3배)로 계산해야 정확하다⁵⁾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계산한다면 2002년에 가면 6,390억달러의 수입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산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5,210억달러와 비교할 때 놀라운 수치이며 엄청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2년의 국내총생산(GDP)은 9조8천억달러에 이르는 반면 미국은 9조7천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행히 우리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안보체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지만 중국과 북한은 일반적 외교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혈맹지교라는 것을 지정학적으로나 현대사의 여러 관계로 볼 때에 쉽게 알 수 있다. 작년 7월 27일 북한의 소위 조국해방전쟁승리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호금도(중국 공산당 정치위원)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북한이 “자주독립과 자립경제개생을 견지해 거대한 성취를 이룩했으며 아시아의 평화정책에 크게 공헌했다”고 치하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한 영도아래 이루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5) 5.3배의 계산법은 GNP 370달러가 GDP(gross domestic product)로 계산할 때 생기는 차이에 대한 수치에 의한 것이다.

깊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특히 그들은 “중·조간의 전통적인 우의는 각자의 혁명1세대가 키워왔으며 역사의 온갖 시련도 힘차게 극복해 왔다”고 말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확대교류”를 제창하고 구소련의 멸망에 대해서 공산주의국가의 단결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주용기 중국 부총리는 ‘상호존중’,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함으로써 경제면에서는 개방정책 추구가 계속되지만 이념과 정치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을 본다면 최근에 김일성의 사망으로 힘의 공백이 있을 것같은 추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계자인 김정일은 한국이나 서방세계가 과소평가할 만큼 술주정뱅이나 난봉꾼이나 저능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방정국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빨갱이 논리’에 의한 반공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비난과 비하의 논리지만 적어도 2,300만의 인구를 가진 북한이라는 한 국가의 정권을 ‘엥터리 인사’에게 맡길 바보는 없다는 평범한 논리로 봐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북한에 납치되어 8년이나 김정일과 접촉했던 신상옥·최은희 부부의 증언도 그렇고 최근 장례식에 다녀온 세계일보의 박보희씨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이 절대적이거나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자료에 의하면 1964년 노동당에 발을 디디고 부터 1970년대의 혁명소조활동이나 ‘권력잡기’노력을 즐기치게 해 온 것을 볼 때에도 그는 결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김신조일행의 청와대습격사건이나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김현희 KAL폭파사건 등을 볼 때 소위 혁명위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몫시도 ‘적극적’이고 ‘영악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혹 부전자전의 논리로 본다면 굉장한 수준급의 두뇌소유자일 것이라고 치부도 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해방이후에 정규교육을 받

은 엘리트(노멘크라투라)라는 점이다.

물론 ‘항일유격대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이나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식의 소위 주체사상을 통한 혁명성취의 내용은 대단히 불분명하다.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매년 나오는 “기와집에 잇밥(쌀밥)먹고 비단옷 입고 살아가는” 지극히 소박한 사회주의의 건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혁명위업의 최종 성취단계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남조선을 그러한 공산주의사회식으로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똑똑바보’의 말로를 가고 말일이지만, 김일성의 소위 혁명1세대의 유산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김정일 자신의 경륜을 펴서 오늘의 세계와 국제정치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최소한 중국식개방이라도 진행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도 혁명1세대와 2세대간에 어떤 틈이 생길 때에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김일성이 남기고 간 많은 숙제중에 ‘인권의 보장’과 ‘민주화의 길’을 지혜롭게 열어 갈 때에 통일의 길에 접근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핵개발을 통한 무력도발은 ‘빨치산문화’의 유산일 뿐이지 이 밝은 천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냉전이후 체제에 돌입하여 ‘신세계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 1940년대의 스탈린식의 하향식정치와 권위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군사력과 정치역량보다는 인간의 자유와 민주화사회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의 인정이 신세계질서의 내용이라고 할진대 속히 이 물결을 타야 목적지에 도달할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김정일은 조국통일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전쟁의 직접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큰 영광과 희망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3. 태평양시대의 가능성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1993. 7)하고 국회연설을 통해서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신태평양공동체』를 제안하고

- ① 미국의 방위공약 확인
- ② NPT의 계속 실천
- ③ 공동안보 도전에 대한 대처
- ④ 역내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 등을 제안·강조하였었다.

또한 이 지역내의 다자간경제협력을 위해서 APEC각료회의를 정상회담으로 전환시켜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추진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환태평양시대(The Pacific Rim Era)라는 말은 유럽중심의 세계사가 태평양지역으로 넘어 온다는 말이다.

이것은 태평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뉴질랜드, 호주 등의 나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북한도 환태평양시대의 회원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연안국들의 제반 사항이 각각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의 1인당 GNP가 24,500달러가 되는데 비해서 북한은 1,200달러이고, 민주와 자유를 만끽하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북한 같이 폐쇄된 나라가 있어서 이로 인한 불균형 내지는 부조화 때문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문제의 나라이면서 낙후된 북한을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격상된 회원국이 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빈곤을 말할 때 ‘제1빈곤’(the first poverty)과 ‘제2빈곤’(the second poverty)으로 나눈다. 제1빈곤은 우선 의식주를 해결 못해서 받는 곤경을 의미한다. 우리 형제, 우리 겨레의 반쪽인

저 북쪽은 바로 제1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누가 이것을 외면할 수 있는가? 같은 동포, 같은 피를 나눈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단순한 인기나 정치(show)가 아닌 진실한 동포애로 나서야 한다.

제2빈곤은 의식주문제는 해결했지만 교육문제, 문화문제 보다 향상된 생활환경을 향수하지 못하는 빈곤을 말한다. 가령 학자금이 비싸서 대학교를 못 간다든지, 고급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다든지, 해외여행을 못한다든지 하는 빈곤을 말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은 ‘최대의 겸손’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서의 가르침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한다.

옛날 우리나라의 구전 동화 가운데 ‘의좋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이다. 아우와 형이 서로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밤마다 몰래 자기 논의 벼단을 지게로 저 가져다 주는 일을 반복하던 중 어느 달 밝은 밤에 벼단을 진 채 길에서 서로 만나 우의를 확인하는 그러한 ‘의좋은 형제’로써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정치적 업적이 아닌 형제애로써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동포들이 정녕 같은 민족이라면 도와주는 벼단을 팔아서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말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원망하기전에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태평양시대의 가능성은 곧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정에 대한 가능성도 포함한다. 여기서 누누히 언급하고 있는 지역은 지리적(geographical)인 개념과 인구중심(core-population)적인 영토점유지역의 인접지역개념이다. 그러므로 중국(960만km², 13억 인구), 일본(38만km², 1억2천만 인구), 남한(9만8천km², 4,500만 인구), 북한(13만km², 2,300만 인구), 그리고 시베리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지역에 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전쟁을 억제

하는 평화장치를 해 두자는 의미일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말한 『신태평양공동체』(1993. 7)에 앞서 198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아시아안보와 협력회의』(CSCA-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가 있었고, 1990년 12월에 세바르드나제 당시 소련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안한 『갈등방지본부』(CPC-Conflict Prevention Center)설치에 대한 개념 등이 모두 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캐나다의 『동북아 및 북태평양 안보협정』을 들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CSCA(1990)도 있다. 금년에 방콕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포럼 ; ASEAN Regional Forum)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기구(North-East Asia Security and Dialogue Organization)를 제안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안보기구의 중요 대화상대는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미국-러시아-중국-일본-한국-북한 등으로 대화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화와 만남을 통한 이해증진을 통해서 서로 정보와 생각을 나눔으로써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며 노력이라고 볼 때에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 더 첨가한다면 북한도 유엔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상 몇몇이 이 기구의 회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고 배우면서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지 스탈린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적화혁명노선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Ⅲ.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북한은 현재 14킬로톤의 원자탄 2개쯤을 소유한 것으로 SAIC (Science Application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부사장으로 있는

케이박사는 말하고 있다.⁶⁾ 14~15킬로톤은 TNT 1,000톤의 파괴력인데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흡사한 정도라고 한다. 인구밀집지역에서는 20~30만이 사망하고 100만 이상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위력이다.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저의는 무엇일까? 우리는 아연실색하면서도 ‘6·25전쟁과 같은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지’ 라고 믿고 싶고, 국제사회의 고립과 무시당하는 곤혹스러움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내지는 평화협정(상호불가침조약)을 맺으려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1992년 12월 남북간에 합의·서명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아직도 유효하며 절대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는 비인도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주석이 생전에 누누히 언급한 말, 즉 “우리는 원자탄을 만들 ‘의사’도 없고, 만들 ‘실력’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영변, 박천, 태천, 신포의 원자력시설이 원자로를 이용한 전력생산용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농축우라늄 원자로가 아닌 경수로원자로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한국을 위시한 미국이나 일본이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곧 동북아평화정착에 필요한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생전에 한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동력자원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6) Dr. David A. Kay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수석조사관을 역임한 핵물리 전문가이다.

IV.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그 전망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대로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물결인 새세계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날 냉전의 고도처럼 남아 있거나 과거의 틀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주의철학자였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냉전시대의 인간들은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존재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에 인간들은 (물론 국가, 정부, 조직들도) 선전선동, 스파이활동, 사보타지, 대규모 집회, 그리고 시민전쟁 등을 자행해 왔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중동전쟁, 월남전쟁, 한국전쟁, 쿠바위기 등 많은 전쟁과 위기도 있었다.

미국은 이제 1947년에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모든 국가안보기구 및 전쟁수행 기구들을 재정비·쇄신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보국마저도 없애고 국가정보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군대의 조직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계획에 의하면 1999년까지는 현역군인을 32% 감소시킬 것이라고 한다. 육군의 사단수를 45%나 줄이고 해군함정을 37%나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50억달러나 국방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세계질서에 돌입하여 민주화의 향상과 인간의 권리신장과 경제적인 혜택을 위한 새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자존심때문에 부족한 것을 숨기고 고집하고 폐쇄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계의 물결을 타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구가하는 공동운명체가 되고 1민족 1국가로 통일되는 민족의 대경사를 치르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슬기로운 민족의 위세를 세계만방에 또다시 떨치기를 기원하면서 소고를 끝맺을까 한다.

■ 토론내용

사회(정석홍*) : 지금부터 제1분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원구¹⁾ : 정세흐름으로 볼 때 북한이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가 냉전체제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 질서가 개편되기 시작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수교하므로써 북한은 그동안 지지해주던 우방국가의 세력권에서 격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북아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졌으며, 한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북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져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 북한은 무엇이라도 잡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라고 하는 명분과 핵을 내세워서 미국과 협상하면서 미국의 지원과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기울어져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북한을 위해서 또 동북아의 질서를 위해서 해야할 것은 한국이나 우방세력들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야 이 지역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인 역학관계로 볼 때 세력균형의 파괴를 시도하는 한 무력행위라고 봅니다. 냉전상태가 종식된 상황에서 세계의 질서는 결국 이데올로기보다는 각국간의 실리가 표준이 되어서 새롭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미국도 역시 동서양진이 대립하고 있었을때는 비록 독재국가라 할지라도 서방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1) 미국, E.S.A. 엔지니어링 코리아사 대표

세계를 추종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주었지만 그와같은 상태가 아닌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서방의 이데올로기 혹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양분법적 기준을 가지고 우방국가다 또는 적대국가다라고는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적대국가가 아니라는 성격이 분명히 될것 같으면 국가 실리를 위해서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과 손을 잡을 태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볼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남과 북은 첫째로 대미관계에 있어서, 남한은 보다 더 공고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대북한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그 기본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이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원자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미국·프랑스·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것은 그나라들을 우리나라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에 대처하는 강도나 정책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북한은 우호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방세계의 시각으로 볼때 북한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침략의 가능성을 항상 표시하고 국제질서를 교란하면서, 그리고 또 국제적, 외교적인 외양이라던가 혹은 또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호국가의 대열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항상 위협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대국가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말로는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이 평화를 사랑한다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

의 활동에 있어서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의사와 능력을 성실하게 보여주어야 우호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구도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항상 정치·경제문제가 자꾸 전면에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종래의 기본구도에서 각도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남북문제를 민족의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정치문제는 항상 그 기초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민족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 상태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문제 즉 남북공통의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상징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가령 노래나 국기를 만든다든가 혹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상징이나 이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과 이념을 위해서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선행되지 않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것 같으면, 항상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이 타방에 의해서 강요된 어떠한 형태를 맞아 들이는 비극적인 상태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또 세계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틀은 남북간에 평화가 유지되면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만이 지역적인 평화와 안정,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서방국가에서 볼때 국제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이며, 적대국가가 아니고 우호국가라고 하는 태도를 북한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하나니까 남북한이 같은 상징을 가지고 그 상징과 철학안에서 다같이 통일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길을 함께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사회 :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문제와 관련하여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과거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역시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의 시각으로 공동의 상징을 제정하자는 것도 해외동포입장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섭²⁾ : 금번 토론회에서는 30여 분의 통일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환상적이지요, 감상적인 변영과 평화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8세 말엽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열강의 팽창주의, 패권주의가 약소국가를 침식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진정책,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있었고, 지금 일본의 경제대국주의는 무력으로 침략은 안했지만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평화통일하면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는 이룩되는 것이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지 못하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 미국,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미국 서북부지부장

둘째는, 우리 배달민족은 평화애호민족입니다. 다른나라들은 침략근성이 있지만 우리는 침략근성이 없는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가지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애호민족으로서의 기질을 볼때 우리 민족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두만강 관람하고 돌아오면서 솟아오르는 비감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내땅 내조국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한 맺힌 심정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갈루치 핵담당대사가 핵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사항인 경수로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이 기술과 재정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사람들은 한국형 원자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러시아의 것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주체의식이 있다면 미국이 러시아 것을 쓰라고 해도 한국형을 쓰겠다고 해야 될텐데, 내민족 내형제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한국형을 두고서 왜 러시아 것을 쓰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주체의식 하지 말고 진정으로 형제애를 가져주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일본의 무라야마총리는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민족을 압제했고, 독일이 폴란드를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내민족을 총칼로 300만명이나 희생시킨 사람들이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이 북침을 했다고 무지몽매한 북한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국제사회에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형제지간에 솔직하게 과오를 시인하며,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안하며 북한은 적화통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과거를 진실에 입각해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진³⁾: 제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내의 국가들의 국내정세가 안정이 되어야 하며 특히 아직까지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남아 있고 적대적 대결과 긴장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현재 46세이니까 그동안에 수십년을 들어온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13년동안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동북아 평화나 핵 등의 문제는 곧, 힘의 균형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고 또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회의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나 동남아나 미주나 남미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철저히 자국 이익 추세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지금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럽 특히 G7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한 말씀이라면 우리나라 언론이나 국가정책은 거기에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나라는 발언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각자의 힘을 키우고 국가도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을 위한 협상도 힘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give and take”라는 철저한 내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네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핵문제만 보더라도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3) 브라질, 조선일보 남미지사장

아닙니까? 어차피 통일이 될 때까지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좌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각자의 역량을 키워가야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 보면 통일에 관한 단체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통일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통일에 대비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특히 정부가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웅⁴⁾ : 발제하신 두분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먼저 제박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이 민족의 지상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통일이 지상목표이냐? 혹은 통일보다 더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와 정의가 통일보다 더 고차원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자유·정의 혹은 번영을 위해서는 통일이 희생될 수 있어도,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와 정의가 희생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평화와 안정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문제와 목표가 정의라든가 인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 희생되고 어떤 쪽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이냐? 바로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제까지 남한도 인권문제가 심했고 북한도 인권문제가 심해서 남한이 북한에게 인권문제를 말하기가 좀 거북했지만 이제는 남한의 인권문제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밀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이 탈이데올로기 시대이니까 이렇게 하여야 한다, 지금이 신

4) 캐나다, 전 토론토한인회장

시대니까 저렇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또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고 기술적으로 왔다갔다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본 입장을 정해서 인권문제 이런 것을 밀고나가면, 손해를 볼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며 유용한 결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어떤 정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김일성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 혼자 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박사가 북한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하였으나, 북한이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수록 기본적인 목표를 잡아서 밀고나갈 것은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박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훈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산당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지양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집단이 있습니까? 제가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6.25를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이고 잔혹한 일을 많이 했고, 그후에도 나쁜일을 많이 한 엄연한 사실을 목사의 아량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자고 했는데 글쎄 용서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천만 주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용서한다면 이 세상에 경찰도 필요없고 감옥도 필요없습니다. 시장에서 천원 이천원 훔친 절도범은 처벌하면서 지금 2천만명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현행범이고 국사범이며 민족의 반역자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용서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감옥도 다 폐쇄하고 한국의 가정 파괴범도 용서하고, 아버지 죽인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면 그것도 같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훈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사회 : 여기서 지금 박찬웅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전 김영훈 선생님 말씀 가운데서도 공산당 얘기가 나와서 중국 공민으로 계신 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당이 나쁘다는 그 얘기는 공산당 자체가 아니고 북한 김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6.25라든지 남북관계를 볼때 나쁜일을 많이 해서 북한을 지칭해서 말하다보니까 나온 얘기이지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공산당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주경화⁵⁾ :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발언준비가 없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사연구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 이 방면에 연구가 없지만 이 좌석에서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진심을 이야기하자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화목하게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을때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하려는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좋은 점 보다 나쁜 점을 많이 생각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내도 이혼하였을 경우 남편의 좋은점과 연애할 때 추억을 생각한다면 복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하나가 진실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다음부터 그 신문을 볼때면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실례를 든다면 한국의

5) 중국, 연변일보 부주필

어느 신문사 사장님이 연변에 오셔서 백두산에 올라갔지요. 그날 따라 풍교롭게도 폭우가 쏟아져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열흘 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백두산 천지 사진을 크게 내고 “쾌청한 날에 우리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고” 등등으로 보도가 났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신문사 사장이 이렇게 거짓말 보도를 하는데 다른 기자는 더 말할게 있느냐? 그부터는 그 신문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분이 한국에 가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였는데, 그후 잡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다르게 났어요. 그분이 발언한 것은 고국에 온 자기 감상을 얘기했는데 잡지에 난 것은 조국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니 어떠니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편집국장에게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발언 원고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무엇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느냐” 하니까 편집국장말이 “편집과정에서 기자가 결론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자인하고 사과편지를 써 보내왔습니다. 그때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후로는 그 신문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마음을 줄때,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도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 온 한분이 술좌석에서 중국의 아가씨가 백두산에 안가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테니 백두산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너무 기뻐서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속한 호텔앞으로 갔더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후에는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한국분은 “술좌석에서 술김에 한 얘기인데, 중국의 아가씨는 진심으로 듣고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해서 연

구한 적은 없지만 한국분이나 북한분이나 통일을 논할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생기고 통일의 길도 가까워지리라고 봅니다.

사회 : 주경화 선생님께서 한국신문의 허위보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북한의 보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분의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분 발제자께서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호⁶⁾ : 통일이 지상목표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일의 당위성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반만년 동안 한 핏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불신과 대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인 민족사의 단절을 막고 위대한 우리 한민족의 시대를 구가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마땅히 이룩하여야 하기때문에 통일이 우리의 목표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상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남북의 대표가 만나서 연방제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통일을 선포해야겠지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지상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의 통일이냐가 핵심입니다. 통일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통일을 이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와 통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6기 민주평통 출범식 개회사에서 밝힌 “자유없는 통일이 불안전한 것처럼 통일없는 자유도 불안전한 것이다. 또 번영이 없는 통일이 불안전한 것처럼 통일이 없는 번영도 불안전한 것이다”라는 기본 입장과 같이 결국 이런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그것을 구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

6)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니다.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서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방향과도 합치하는 것이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되는 관념으로서 거기에 기초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평화와 안정, 정의와 인권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와 민주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치정권, 일본의 군국주의가 보여주었습니다. 히틀러와 같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여 총동원체제를 유지하였던 정권은 국내적인 불만과 민주화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돌릴 수 밖에 없고, 또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설정하여 600만명을 가스실로 보내는 등 침략적인 근성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바로 북한이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이 1인 우상화 독재정권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인권을 탄압하고 「하나의 조선」논리에 따라 남조선 혁명, 적화통일 노선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불확실하고 침략근성을 갖고 있는 독재정권이 핵을 가지려고 할때 국제사회는 그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⁷⁾ :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 얘기가 충분치 못해서 박찬웅회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신것 같은데, “공산당을 용서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김정일이 술꾼이요, 난봉꾼이라고만 매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마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당은 나쁜놈이고, 6.25전쟁을 일으킨 놈이니까, 또 이놈들은 나쁘니까 무조건 나쁘다. 그저 이러한 논리로서 통일에 접근한다든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잘알고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용서할 건 용서하는 즉, 정확하게 순서를 밟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은 다음에 주석직을 계승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주석직 승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정일 가족내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든가, 오진우측 개혁세력들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김일성을 애도하는 마음을 후계 정치에 이용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등 3~4가지의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92. 4. 9에 개정된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 어디에도 주석의 사망시, 또는 유고시에 주석직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계자는 김정일로 알고 있지만 발표를 하지 못하고 당분간 집단지도체제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헌법정도는 검토하면서 북한을 이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1964년부터 지금까지 30년동안 후계자로서 탄탄한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공산진영의 엘리트로서 국제정세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아왔으며 재주도 있고 머리도 있다고 봄

7) 미국, 미안보협의회 한국안보문제 책임연구위원

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적에도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이기지, 상대를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형편없는 자라고만 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공산당을 그냥 나쁜놈이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이면서도 진담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 김정일을 불러 놓고 “이봐 내가 지난 50년동안 통치를 해왔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내가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승만주구를 내몰고 통일을 해 불욕심으로 전쟁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 전쟁은 너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실패했다. 350만이라고 하는 귀중한 인명을 죽였고, 1천만 이산가족에게 슬픈한을 남겨왔으며, 국토의 94%를 폐허시키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 더 큰 실수는 민족의 불신을 가져와서 오늘날까지 통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너는 혹시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제2의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목사의 신분이고 해서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해 나가자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회 : 이제까지 두 분의 발제와 다섯분의 코멘트·질문이 있었고 아울러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코멘트와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목⁸⁾ : 오늘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것인지를 듣고 싶어서 이자리에 왔는데 그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주

8) 대한신학대 교수

경화선생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남한사람과 신문보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주셨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실례를 하나 들어 주시고 정말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식⁹⁾ : 남북통일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한 얘기이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남북 기본합의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하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늘 주체사상을 말하고 민족통일에 있어서 자주를 거론하면서 이것을 미군철수·군축우선 등으로 자기나름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남한을 정말 주체국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같은데, 요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만 자꾸 논의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종운¹⁰⁾ : 제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내용중에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이 앞장서서 시급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NPT나 IAEA 또는 UN에 직접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우리와 미국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

9)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신학대 교수

10) 대만, 성부촬영기업 부사장

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 우선 세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계속하겠습니다.

제성호 : 북한이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사람의 말, 표현에 의하면 해방을 시작했는데 해방이 저지가 된 곳이 38선이라는 것입니다. 저지시킨 세력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해방에 기초해서 생각할 때 남조선이 미군을 끌어대어 군정을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 북한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창건하고 1950년에 그들이 미완성한 조국해방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것인데, 그것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6.25전쟁발발시 미군이 철수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크게 혼이 났습니다. 일주일만에 남조선을 해방시켜 공산화시킬줄로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나서도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해서 대대적인 혁명건설을 이룩했다고 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힘을 비축한 후에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주라는 개념 또한 반외세·반미를 의미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의 일환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이란 남한의 정권은 연공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공산화 즉,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1945년부터 1994년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분명한것은, 북한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체제입니다.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노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인 범위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온세상에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선」논리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남한을 미제의 앞잡이, 미제의 주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체제 인정을 왜 했겠습니까? 이는 선전차원이며 말과 속마음은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지명하여 비방·중상·공격하고 있고, 기본합의서 체결후에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여러가지의 파괴·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까지도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해결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실질적인 남북 상호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경화 : 북한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을 것이 없습니다.

사회 : 그러면 방청석에서 몇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용¹¹⁾ :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을 항상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언론이 통일문제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문제는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큰 문제, 그리고 상대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대와 나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부터 달라지는 운동 즉, 나부터 북한을 정확히 아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거 40년간 고정화 되었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하면서 북한이 변하는 것을 바라고 또 북한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의 실천적 사고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보문제·정상회담문제 등이 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보는 시각, 즉, 통일의 바른 좌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신사고운동, 북한을 바로보며 바로아는 운동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북한이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되어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일¹²⁾ : 북한이 우리 한국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에는 「한국민단」과 「조선총련」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총련」이라고 이야기 하고, 그들은 우리들을 그냥 「민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총련」이라고 하면 「조선 총련」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11)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2) 일본, 민단 아끼다지방본부 단장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조선은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두나라가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인가? 하나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알겠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체제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명칭도 보면 ‘남북간 수상 회담’ 또는 ‘총리대신회담’이라고 확실히 정해놓고 회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북한을 보면 현 체제만을 유지하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성호 박사와 김영훈 목사님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고, 더 시간이 있으시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 습니다만 우리들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깐 좀 편파적인 이야기가 되고 중도적 얘기가 부족한 것 같으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하겠는가 입장을 바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조금전 민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다루었으면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동북아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점들이 지금 여기서는 덜 다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좋으신 말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채박사와 김목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 문제는 한국전쟁에서 한국 이승만정권이 휴전협정에 조인을 안하고 미군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이 세그룹이 싸인을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조선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국제적으로 인

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술전략적 차원에서 괴뢰정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여러 비밀서류를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도 북한이 남한을 지칭하거나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한을 해방하려고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해방시키지 못한 미해방구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해방구인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통일혁명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북한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북한을 잘 유도해서 같이 얘기하고 당면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기술을 좀더 발휘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성호 : 주사파가 있듯이 북한은 아직도 대남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국과 핵협상 목표는 수교내지 평화협정 체결에 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명분은 결국 미군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15이후에 남조선 해방이 안된 것도 미군 때문이었고 조국해방전쟁이 실패한 것도 미군 때문이었고 지금 연방제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미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철수는 지금 북한의 체제유지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최대의 여건이며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대남정책은 미군철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조선논리는 노동당규약에도 변함이 없는데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 보면 공화국영역 밖에 있는 동포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절충적 입장에서 정경분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남관계에 있어서 또 통일을 위한 명분으로는 하나의 조선논리를 포기할 수 없지만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

해서 남한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취하고 있듯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반자로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때는 취하고, 좀더 경계할때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 몇마디 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였는데 북한의 핵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구소련에 수만개의 핵이 있는데 북한에 핵 한 두개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수만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해서 국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또한 핵무기를 미국땅에다 쓸 것도 아니고 중국땅에다 쓸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또 일본땅에 쓸 것도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훈목사님도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핵문제는 신뢰성 문제이며, 제3세계에 이런 핵기술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앞으로 평화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카드를 쓰게 되면 그것이 남쪽에 공갈용이 되고, 남북한의 평화협상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한 두개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통일되면 우리 것인데...” 이걸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통일되어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도하에 통일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남북간에 모든 문제를 평

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북간의 협상과정에 쓸데없는 압력으로, 카드로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상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문제는 북한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지금 온세계가 핵문제를 가지고 들끓고 있는데, 북한의 주석이나 북한의 공식 태도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적도 없고, 가질려는 생각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뢰성 있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너희들이 미군기지에 핵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미군기지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국제사회로부터 핵 관련시설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2곳의 미신고시설을 좀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핵무기 저장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미군기지는 우리가 다 보여줄텐데, 왜 너희들은 안보여 주느냐? 서로 투명하게 확실하게 밝히자”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일도 없고, 만들지도 않는데 보여줄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뢰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까 박찬웅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통일은 누가 해야 되는냐? 결국은 남북한의 7천만 민족과 해외동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 또 앞으로 주석될 사람인 김정일의 성격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자료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실정을 아는 것은 귀순자들의 얘기 등으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단편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간에는 개방해야 됩니다. 서로 오고 가고 또 정상끼리 만나보고 성격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결국에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뭔가 길을 찾아야지, 명분만 내세워서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에 관한 얘기입니다. 6·25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개문제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6·25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공개가 되어서 역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민족사에서 청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국내의 학생들이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해외동포들도 ‘조선은 하나다’와 ‘조선민족은 하나다, 조선반도는 하나다’라는 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민족은 하나다, 조선반도는 하나다’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한민족이든지 조선민족이든지 하나이고 또 한반도이든지 조선반도이든지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논리는 조선은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이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니까 이것은 해방시켜야 할 지역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며 이런 논리는 혁명의 논리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어야만 남북간에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북한보다도 12배나 높고 국력 또한 높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조선은 하나니까 남조선에서 미제가 물러나면 통일된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한시대가 지났습니다. 김정일시대가 돌아오는데 김정일시대에도 북한이 과거에 집착했던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속에서 남조선해방운동을 계속 부르짖는다면 남북관계는 또 경색되고 통일 또한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둘이 평화공존하면서 하나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분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 분과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전망

발제 / I 김춘송 (중국, 흑룡강대 교수)
II 장현순 (중국, 대련일본경제연구소장)

토론 / 오종운 (대만, 성부촬영기업 부사장)
박헌일 (일본, 민단야끼다지방본부 단장)
장민웅 (영국, 퍼모스트하우스 대표)
이동욱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제 연구소 교수)

사회 / 민병용 (한국, 한국일보 통일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전망

김 춘 송*

I. 세계 질서의 재편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신구질서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세계정세의 급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질서 재편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로 과거의 동서간 정치·군사적 대결과 반목의 시대는 오늘날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으로 공동 번영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시대로 바뀌었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서로 대립하는 냉전시대에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만 해도 미·소 두 개 열강이 이 지역을 중요한 군사전략 지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 캄보디아전쟁 등이 발생하는 등 몇십년간 긴장된 냉전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세계정세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소 양대 열강의 직접대화와 제2차 대전후 45년간 분단되었던 독일의 통일 및 소련연방의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변 등으로 냉전시대는 경제전쟁시대로 전환하여 각국은 평화공존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신데탕트의 조류가 세계정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허룽강대 경제연구소 소장겸 경제학과교수, 중국 동북사대 졸업, 서강대 교환교수 역임

오늘날 세계에서 각국의 강·약은 군사역량에 있지 않고, 경제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국력에 있다. 이른바 종합국력이란 경제력(GNP, 1인당 GNP, 경제구조, 경제발전 전망 등), 과학기술력(과학기술의 연구수준, 응용수준 및 역량), 인력(노동력의 양과 질), 군사력(무기장비, 인원수, 전략전술), 자연력(지리적 위치, 지하자원 및 기후) 등을 말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간에 경제·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국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질서의 재편에 큰 작용을 할 뿐 아니라, 21세기를 맞는 각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 질서가 다극화, 집단화, 지역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세기이상 통치해 오던 미·소 패권시대는 구소련의 붕괴로 양극대치의 세계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주도하는 다극화시대로 전환되었다. 금세기 80년대 이후 세계 정치·군사 정세 변화에 따라 세계 경제계에는 두가지의 병행하는 발전추세가 생성됐다. 즉, 하나는 세계경제발전의 국제화,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 발전의 집단화·지역화이다. 세계경제발전의 국제화 추세가 생성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80년대이후 구소련, 동 유럽,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으로 계획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진정한 세계통일시장이 형성되었다.

② 정보화시대에 들어선 세계경제는 교통의 현대화로 각국간의 거리를 크게 단축시켰고, 또 컴퓨터 통신수단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국간의 경제관계는 날로 밀접하게 되어 한 나라의 발전은 타국 경제발전과 국제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른바 세계경제 발전의 집단화·지역화란 몇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몇개 국가가 연합하여 경제자유무역지대를 건립, 상호관세감면, 상호특혜를 교환하면서 각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블럭화된 경제조직이 20여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광

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것은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현재 논의중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이다. 금세기 50년대에 태동한 유럽공동체는 서구 12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데 1993년에 구라파 통일 대시장을 이룩하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연합하여 건립한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인구 3억 5천만명으로 유럽공동체를 상회, GNP도 유럽공동체보다 높은 수준에 달한다. 아·태 경제협력체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 외무·통상장관이 회동함으로써 탄생되었다.

셋째, 세계경제 중심지역이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전환했다. 세계경제의 발전과 변화는 1970년대까지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국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비약적 경제성장,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신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아·태지역이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했다. 아·태경제협력체는 비록 비정상적 집단성을 갖고 있지만 성립된 이래 경제정책의 조절, 경제협력과 각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분야에서 모두 큰 성과와 높은 수준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 지역을 볼 때 1950년대에 일본이 경제체제 개혁에 성공한 다음, 60년대에 아시아 '4소룡'이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여, 70년대에 동아시아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다투어 정부의 경제통제를 완화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켰다. 80년대에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고, 90년대에는 베트남 등 인도지나 국가들까지도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 국가들은 정부주도하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놀라운 경제성장 성과를 이룩했다. 현재,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국가들의 GNP는 세계 GNP의 60%를 차지하고, 인구는 19억으로 세계인구 전체의 34.5%를 점하고 있으며, 무역액은 세계무역 총액의 4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은 "21세

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II . 동북아경제권의 특징과 의의

오늘날 지역경제의 쉼기는 세계경제 다극화의 필연적 산물이며 역시 세계경제 발전의 새로운 특징이다. 1989년 정식으로 발기된 아·태경제협력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큰 지역 경제공동체로써, 이를 기반으로 일본, 한국, 중국 등은 ‘환 일본해 경제권’, ‘황해경제권’, ‘동북아경제권’, ‘대중화경제권’ 등 소지역의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구상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학자들간의 논의단계에 있지만, ‘동북아경제권’ 구상만은 관련된 국가와 학자들이 큰 주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은 일본열도, 한반도의 남과 북,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포함한다. 이들 6개국 6개지방의 총 면적은 약 1,600만 km²로 세계 육지면적의 12.6%를 점하고, 인구는 3억으로 세계인구의 6%를 차지한다.

동북아경제권은 부존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중국, 시베리아와 조선은 세계적인 철광산지로 아시아 철강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생산국이고, 조선 및 일본의 석탄생산도 적지 않다. 시베리아와 중국은 후발 산유국으로써 세계 석유생산량의 1/4을 차지한다. 중국의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은 매우 풍부한 삼림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의 삼림면적과 임목(林木) 축적량은 세계의 1/4을 차지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국의 하나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가축자원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구리, 형석, 물리브덴, 우라늄, 금, 중석, 석탄 및 석유의 매장량도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에는 철, 중

석, 니켈, 구리, 은, 마그네사이트 등의 금속광물과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한반도에 부존하고 있는 석탄은 80% 이상이 무연탄인데 매장지역의 89%를 북이 차지한다. 매장량 30억톤의 무연탄도 거의 전부가 북에서 채굴된다.

동북아경제권은 노동력자원도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1992년말을 기준으로 총인구 11억 7,329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한다. 1991년말 기준 노동력자원 총수는 전체 인구의 61.3%인 7억 982만 명이고 이용률은 82.2%에 달한다. 사회노동자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산업 59.8%, 2차산업 21.4%, 그리고 3차산업 18.9%로 되어 있으나 사회노동자의 73.8%인 4억 3,093만명은 농촌 노동력이다.

동북아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자본과 기술, 천연자원 부존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선진 경제대국 일본과 신흥공업국 한국, 그 외의 중국(동북 3성),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몽골, 조선 등 국가(지역)는 발전도상에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미개발국가(지역)이다. 1993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일본은 약 3만 달러, 한국은 7,000달러, 러시아 극동지역은 3,000달러이고 기타 몽골, 조선 및 중국 동북3성은 1,000달러 이하 수준인 후진국가(지역)이다. 권역 내 각국은 산업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신속한 경제발전을 해온 일본과 한국경제는 GDP 혹은 GNP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꽤 낮는데 비하여 사회주의체제에 따라 경제발전을 해 온 북방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중국의 경우 2차산업 비중은 한국과 같은 수준이지만 3차산업의 비중은 한국보다 낮다. 몽골은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 2차산업 대부분은 단순 원료가공업이고 3차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산업구조상의 큰 격차는 자본의 축적과 산업기술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

지역내 각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은 산업고도화 단계에 있는 나라로 막대한 자본과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고, 선진대열에 진입해 가는 한국은 중간단계의 기술과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 제국들의 경제발달 정도와 부존자원의 현황에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구주연합 등 기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동북아경제권내 각국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상의 상호보완·호혜성이 경쟁성을 초월한다. 주지하다시피 유럽공동체 각국은 경제발전 정도, 자본, 기술, 노동력, 자원 등에서 같은 수준에 있기에 부득불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동북아경제권내의 선진국,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가간에는 경제발전수준 격차, 부존자원과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권역내 경제협력 관점에서 타국의 장점으로 자국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더욱 신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동북아경제권내 각국간의 경제협력은 수직분업을 위주로 수평분업과 수직분업이 교차적으로 진행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각국간의 경제협력은 당연히 수평분업 위주로 나타나게 된다. 동북아지역내 선진국, 중진국, 제3세계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의 심한 격차로 부득불 수직분업의 경험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경제협력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예로 중·한 양국의 무역관계를 볼 때 수직분업의 경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총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기에 산업구조, 상품구조, 시장경쟁능력 등에서 일본·한국에 크게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개별영역에서 어떤 기술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일본·한국은 상품원가를 내리고 상품 판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본, 기술, 산업을 제3국에 이전하고 있어

서 수평분업의 경제협력도 날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경제권내 각국의 상이한 이데올로기, 국가·사회제도, 경제체제로 당분간 경험은 양자간(쌍무)협력 위주에서 차츰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각국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를 실시함으로써 각국간의 경제협상을 쉽게 이루어 공동시장의 형식으로 각국의 자본, 기술, 자원, 상품 등이 자유롭게 제3국에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권역내에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상태에 있고, 일본과 조선이 미수교, 러시아와 일본간의 북방영토문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병존 등으로 권역내 각국간의 공동경제협상에 애로가 있어서 당분간은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부터 다자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동북아지역내에서 각국은 타국의 국가제도와 경제운영체제 인정을 전제로 정경분리와 민관분리의 원칙아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지역내에 존재하는 정치·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미수교 국가간이나 분단된 국가간에는 세계정세 흐름의 주류에 발맞추어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민관분리 원칙아래 민간경제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정치적 평화공존을 실현하며, 민간경제교류와 협력의 발전으로 정부간의 경제협조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동북아지역의 대부분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직접교역의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간은 당분간 직접 경험이 불가능할 경우 제3국(지역)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와 협력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Ⅲ. 두만강지역 개발을 통한 다자간의 경제협력

1.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형성과정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 조선, 몽골이 정회원국이고 외에 일본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참여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은 관련국가의 협조하에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고 있다. 1991년 3월 국제연합개발기구가 제1차 사업기간(1992~1996)중 남북한, 중국, 몽골 등 4개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세가지 동북아 협력사업(두만강 유역개발, 대기오염과 에너지 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 등)을 추진키로 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국제적인 다자간 협력사업을 제기하였다. 그 후 UNDP는 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1991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4개국 정부대표를 공식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두만강지역 개발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며, UNDP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두만강지역 개발을 현지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 UNDP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국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UNDP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나아갈 두만강지역 개발의 구체방안까지 제시하였다.

UNDP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세 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경제특구를 건립하는 방안, 제2안은 각국이 경제특구를 상호 인접지역에 건설하여 각국이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제3안은 각국이 일정 지역을 하나의 운영기구에 제공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특구지역의 규모와 위치의 설정에 두가지 방안을 제기했다. 하나는 중국 연변의 훈춘, 조선의 나진항,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을 연결하는 약 1,000km²의 소삼각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연길, 조선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대삼각지역이다. 그리고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발전, 하부구조의 개선 및 역내무역의 확대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 동북아시아 개발기구(NEARDA)를 제기하였다. 보고서는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10여개의 현대적 부두와 50만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의 주택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300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1992년 2월 두만강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 제1차 서울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몽골, 남북한, 일본 등 6개국과 UNDP와 아시아 개발은행(ADB)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실무작업 진행방향을 서로 의논했다. 따라서 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2.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의의

두만강 하구는 동북아시아지역 교통의 요충지일뿐 아니라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주변지역 국가들의 관심 대상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60여년동안 주변국가의 정치·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거대한 개발잠재력과 경제적 중요성은 오랫동안 정치·군사적인 목적에 가리워져 있었다. 그러던중 금세기 80년대부터 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러시아의 개혁·개방으로 각국은 새로운 경제전쟁시대에 발맞추어 다자간의 경제협력으로 두만강지역의 경제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은 두만강 하구지역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할 뿐 아니라 관련국 간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지역개발계획이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성사는 경제면에서 동북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협력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과 아·태지역에 보다 안정된 평화체제를 이루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첫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각국 정부차원의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각국이 상이한 이태올로기, 국가제도, 경제체제를 보유하지만, 제2차세계대전후 처음으로 국가간 협력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역 경제발전 뿐 아니라, 아·태지역의 안정 평화와 공동번영을 더욱 유력하게 추진 할 것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UNDP가 직접 주관한다는 사실은 탈냉전시대에 각국간 국제연합의 역할을 제시함으로 국제연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20여년간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단계 계획을 제공하여, 동북아경제권내 국가들간의 양자간 및 다자간의 전면적인 경제교류와 경제협력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국가들이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로 전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기에 이 개발계획의 실시는 나아가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사회주의국가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중국 등 국가들의 개혁·개방을 지지하고 성공하게 했다는 점에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실패와 대조적으로 세계의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성사는 이 지역내 미수교국가간의

경제협력과 관계개선, 한반도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 내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일본과 조선은 아직까지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지만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가운데 직접·간접으로 경제교류를 진행하므로써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관계 개선에도 큰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남북간에 비록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아직까지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면 남북간 직접 경제교류는 곤란하더라도 제3국을 통한 간접 경제교류와 협력은 할 수 있어서 남북한의 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남북한 화해공존과 공존공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 및 권역외 국가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기에 본 계획 실시에는 역내 국가들뿐 아니라 권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수반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이 지역내 국가들 뿐만 아니라 권역밖 국가들에게 까지도 관심을 불러 일으켜 그들과의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전망과 관련 국가들의 태도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개발방안, 규모와 위치, 개발목적 등의 선택은 각국의 경제이익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앞으로 실무작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만강지역의 현실적 개발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국가들

이 승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합리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두만강지역은 오랫동안 정치·군사적 대결이 있어 왔던 역사적 이유로 인해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 낙후한 지역이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지역간에는 주로 물물교환에 의한 변경무역의 방법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두만강지역 개발에는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두만강에 인접한 중국의 동북 3성, 조선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간의 교역 그리고, 일본, 한국, 몽골, 태평양지역 국가들간의 중계무역을 포함한 교역량 및 교역 상품구조를 예측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도시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지역의 당면한 경제교류와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한 인접 3개국의 공업단지, 산업지역, 도시개발,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두만강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우선 중국, 러시아, 조선 등 접경 3국의 현행 법률제도 등을 분석하고 관련국들이 모두 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다자간 협력방안을 각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는 1992년 10월 북경의 제2차회의에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4개 원칙(주권존중, 토지임차, 국제관리, 투자유치)과 기구구성 2원화(5개국 정부간 위원회, 3개 유역국간 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5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PMC회의는 접경국들의 토지임차, 참가국들간의 정부간 조정기구

설치·운영, 개발 시행기구인 두만강개발공사 설립 등의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기본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두만강개발의 청사진을 이루는데 필요한 30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참여국가들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은 두만강개발 이익과 방향에 상이한 태도·전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지난 15년동안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1978~199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9%, 특히 1992년과 1993년 GNP성장률이 12.8%와 13.4%의 높은 수준에 달했다. 지속적인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중국은 거대한 잠재시장의 상태에서 오늘날은 날로 확대되는 현실시장으로 전환했다. 1992년 중국의 수출·수입 총액은 1,656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1,263억 달러의 교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국가들과 진행되었으며, 이는 총교역액의 76%를 점한다. 1978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이 세계 32위에서 1993년에는 제 11위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2000년에는 중국의 연간교역 총액이 4,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관련국가와 국제시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은 이미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1979~1993년까지 중국에서 이미 비준한 외국자본 투자항목은 17만 4천가지, 실제유입 외국자본액은 259억 6천만 달러, 1993년 1년내 새로 비준한 외국자본 투자항목은 8만 3천가지에 달한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한 전문가의 추산에 의하면 금세기 말까지 중국에 기초공업과 기초시설 건설에 5천 6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외국자본을 대량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기초건설 항목의 1%를 미국이 수주할 경우 10만명의 미국인이

취업기회를 얻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1980년대 중국은 아·태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의 기회를 잡고, 이 지역내의 수직분업과 협력에서 대량적 기술과 자본을 흡수했는데, 이것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국제분업이 수직분업에서 점차적으로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이 병행하는 추세에 맞추어 계속 대량적인 선진기술과 외국자본을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의 생산력 발전수준의 차이로 현대화 건설에는 선진적인 첨단기술 뿐 아니라 중간수준의 기술도 많이 요구된다. 중국은 두만강접경 국가이지만, 조선·러시아와 달리 두만강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두만강을 이용하여 동해에 진출하는 여러가지 방안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두만강지역의 교통 및 수송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또 두만강지역 개발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동해연안보다 80년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한 동북3성 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개혁과정에서 중국과 달리 먼저 정치개혁으로 치열한 정치적 갈등과 심각한 민족 모순으로 국가안정의 혼란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에서도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중에서도 곡절의 길을 걸으면서 국민경제 발전의 역성장으로 엄청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내개혁과 동북아지역, 특히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내에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소삼각지역의 두만강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대삼각지역 두만강개발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측은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은 중국과 조선 항만을 위주로 제3국과 해외에 진출할 때 자기들의 기존 항구인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의 경제발전은 근년에 와서 침체상태에 처해 있다. 1987년

에서 1990년 까지의 4년간 연평균 성장율은 1.2%이지만, 1991년의 성장율은 마이너스 5.20%를 기록했다. 구 소련의 해체,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조치와 중국의 실리경제 추구는 조선의 대외경제기반을 붕괴시켜 조선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과거의 폐쇄정책에서 탈피해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지역개발에 적극 참가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 등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하여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두만강개발과 관련하여 두만강하구 연안도시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며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내세웠다.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산업 및 관광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머지 않는 앞날 이곳이 해운, 항공의 요충지가 되리라는 점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서방세계가 관심과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몽골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이다. 몽골은 광업 비중이 매우 큰데 이것은 국가경제의 자원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의 2차산업은 단순 원료가공업에 있고 3차산업 비중이 매우 낮다. 몽골도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국내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두만강지역 개발,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몽골은 이 지역의 내륙국가로서 두만강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30여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친 아시아 4소룡중 으뜸(亞洲四小龍之首) 칭호를 받고 있다. 한국은 제6차 5개년경제개발계획기간(1987~1991)에 연평균 10%의 성장율을 나타냈지만 1992년에는 4.3%로 내려갔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1993~1997)의 경제성장은 연평균 6.7~7.0%

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8년 1인당 GNP수준은 1만 2천달러를 초과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경제발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각종자원 수요도 늘어간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과 높은 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한국의 서해안개발정책과 일치되어 두만강지역 개발로써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극동지방과 경제협력을 이룩하여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한국의 서해안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이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리라고 예상된다. 아울러 조선도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조와 경험, 학습으로 자국의 경제개방을 가속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신속한 발전이 이룩되면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업무에도 큰 기반이 된다.

일본은 이 지역내 제일 큰 경제대국이다. 일본은 1992~93년에 1.5%이내의 비교적 낮은 성장으로 조정기를 맞은뒤 1994년부터 다시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4%이상의 성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성장율을 유지할 경우 1998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약 4만 5천달러에 이를 것이다. 일본의 이런 높은 경제성장 결과는 이 지역에 막대한 자본과 선진적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이 지역의 경제협력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의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경제효율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때 일본 서해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따라서 두만강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진출하는 수송로 이용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IV. 동북아경제권과 남북한 교류와 경험

1. 남북한 교류와 경험의 의의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관계는 과거의 불신과 대립관계에서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존중, 화해·공존, 교류·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였다.

합의서에서 채택한 남북통일은 상대방 체제인정을 전제로 하는 탈이데올로기의 민족통합으로서 정치적·군사적 통합을 절대로 반대할 뿐 아니라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삼키는 ‘흡수통일’도 허락하지 않는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며 진행하는 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나 원대한 차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남과 북은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협력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간의 이해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기초로 평화공존·공영을 이룩하고, 민족통일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실제적 기반을 조성한다. 주지하다시피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통일이후의 경제 후유증이다. 현재 국민경제 발전의 전체 수준면에서 남북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1990년 북의 GNP는 231억달러로 남의 1/10수준에 달하고 1인당 GNP는 1,064달러로 남의 1/5수준이다. 북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면 경제적 곤경을 모면하고 국민경제가 신속히 발전, 국민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리라고 믿는다. 만약 북의 1인당 GNP수준을 2천달러 내지 3천달러로 높여 놓은 후 통일

을 이룬다면 독일통일에서 보는 후유증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양측의 경제관리체제,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당면한 경제문제 등의 차별을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호혜·보완성이 경쟁성을 초월하는 특성으로 서로가 비교적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가능성

남과 북은 오랫동안 서로 상반된 경제발전전략과 정책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 자력갱생·자립경제를 추구하여 대외개방을 무시하는 폐쇄정책을 실행하면서,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보다는 공업을,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을,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생산을 중시해 왔다. 중공업 우선정책의 지속적인 추구로 경공업과 생활소비재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심지어 생활필수품의 결핍을 빚어냈다.

이와 반대로 남한은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가공업 생산에 높은 비중을 둔 경제구조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국제분업을 기초로 농업보다는 공업을 강조하면서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업화 전략으로 소비재 공업, 중간재공업, 자본재 공업, 지식 및 정보산업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북은 천연자원과 노동력면에서, 남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산업구조, 자원구조, 무역구조의 비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면에서 1차산업인 농·임·수·축산업 등에 있어서 남과 북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수평적 무역이 가능하다. 2차산업인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중공업과 경공업 모두가 남이 우위에 있는데 특히 경공업에 있어서는 품질·수량·품종 등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 따라서 경공업분야가 대북진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중화학공업 분야의 석유화학공업과 정유산업에서도 남이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금속공업분야의 철강업은 남이, 비철금속업은 북이 우위에 있고, 기계공업의 자동차·조선업은 남이, 공작기계업은 북이 우세에 있다.

둘째, 자원구조면에서 지하 광물자원과 지상 관광자원에서 모두 북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철 및 비철금속공업의 소재와 유연탄 및 무연탄 등 에너지자원에서 북은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북은 금강산 등 국제적 관광명소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은 자원 빈국으로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그것도 원거리 운송으로 고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은 자원 수요가 적고 개발도 잘 되지 못해 거의 자급자족상태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풍부한 자원을 외화획득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은 자본과 기술은 갖고 있지만 개발 자원이 없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상호 보완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무역구조면에서 우선 무역규모에 남북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1990년 북의 수출액은 20억 달러로 남의 632억 달러의 3%에 불과하다. 수출입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북은 아직도 1차산품 중심의 수출과 2차산품 중심의 수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남은 완제품 중심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중심의 1차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수출입상품 구성면에서 수직 무역협력을 할 수 있고 부분적 공산품에 있어서는 수평무역 협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3. 동북아지역을 중개로 하는 남북교류와 협력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과 북은 대결공존에서 화해적 공존 공영으로 전환하여 남북간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저해요인으로 당사자간의 직접교류·협력은 매우 큰 곤란이 있어서 부득불 동북아지역과 제3국을 통한 간접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비경제 분야에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북 3성 조선족을 중개로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오랜 세월이 걸쳐 남북간에 이루어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려면 서로의 왕래와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간 이산가족들의 왕래와 상봉은 이 지역을 중개로 진행할 수 있다. 다음 순위로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필연적으로 남북통일과 민족통합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동북 3성에서 우리 민족이 집결해 있는 연길시, 장춘시, 심양시, 할빈시 등 도시에 남북의 연합으로 혹은 남과 북에서 각기 주최하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경제교류 학술회의, 민족문화예술 연구회 등을 개최하여 지구촌 각지에 흩어져 사는 동포 대표들을 한데 모아 사회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민족 동질성을 기반으로 민족단합을 추진할 수 있다. 남과 북은 각기 경제, 학술, 문예, 스포츠 등 대표단을 이 지역에 파견해 순회보고, 순회공연 등 활동으로 남과 북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동포사회에 홍보함으로써 해외 동포들이 고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동포들도 민족예술단, 체육대표단, 학술보고단 등을 조직하여 고국을 방문하면서 해외동포들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생활을 남북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또한 해외동포들이 목격한 남북경제, 문화, 사회발전의 현황과 전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호의 오해를 해소시킨다면 바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역을 중개로 경제분야에서 남북간 직접·간접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대인 동북 3

성은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공업기초가 든든하여 한국자본과 선진기술을 흡수·소화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한 합작기업, 중조 합작기업 등은 자기 상품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가 지역을 매체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험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써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자원 공동개발, 경공업분야 협력, 교통통신시설 건설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남과 북이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전망

장 현 순*

현재 세계의 주류는 각국의 경제가 국제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개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될 것이라고 본다.

I. 경제협력의 새 질서

동북아지역은 중국·일본·북한·한국·러시아 등의 국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는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또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발전도상국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동서간 협력과 남북간 협력이기 때문에 동서모순과 남북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매우 복잡하며 모순이 아주 많은 것이다.

전후 이 지역의 경제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즉 자본주의국가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동일 사회제도간의 경제협력의 동시병존시기(60년대 말까지), 동·서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정식으로 시작된 시기(70년대 초부터 80년대 상반기, 무역위주), 동·서 경제관계의 발전시기(80년대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직

*중국, 대련 일본경제연구소장, 중국 동북인민대학졸업, 길림대 일본연구소 교수 역임

접투자의 정식개시)가 이를 말해준다. 이 기간에 중국과 구소련은 잠시 중단은 있었으나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 또한 계속되어 왔다.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간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대외무역의 발전은 비교적 빠르며, 대외투자, 더우기 직접투자의 발전속도는 비교적 느렸다. 그 주요한 원인은 자본주의국가가 사회주의국가의 투자환경에 대해 많은 고려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89년 중국에서 발생한 '6·4사건'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법률과 정책에 의거하여 반혁명동란을 분쇄하고 나라의 정상적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은 순수중국의 내정이었지만, 서방 각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중국과 서방각국과의 경제관계는 중단되었다. 이것은 중국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동북아 각국 내부에서 각종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며 만약 이 때 서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관계와 남북관계가 존재하는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각국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새 국제질서는 응당 주권과 영토를 서로 존중하며, 상호 불가침·상호 내정불간섭·호혜평등·평화공존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핵심은 상호 내정불간섭으로서 각국 정부와 인민은 모두 자국의 국가정세에 의하여 자기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역사발전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는 지구상에서 평화공존할 수 있으며 정상적 관계로 발전시켜 우호적인 왕래와 협력을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의 진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제도의 평화공존과 상호경쟁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와 발전은 자본주의제도로 하여금 적지 않은 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었다. 즉,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사회보장정도의 향상 등이다. 사회주의제도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좋은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자주독립적 평화·외교정책을 실행하며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문화전통·종교신앙의 차이가 국가간의 정상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본주의국가는 과거 부력과 경제붕쇄로서 사회주의국가를 소멸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또한 지금은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로 바뀔것을 전제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만약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한다면 직접투자와 경제원조를 하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사회주의국가의 내부문제처리가 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 경제제재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타국의 내정간섭이며 자기의 제도와 의식형태를 타국에 강요하는 행위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전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각국의 정부와 인민이 어떠한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각국의 권리와 자유이므로 절대 간섭해서는 안된다.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현 세계에서 응당 평화공존하면서 경쟁과 비교하는 과정중에 각국의 정부와 인민으로 하여금 두 제도의 우열을 인식하여 자기의 우세를 살리고 열세를 극복하며 남의 장점을 흡수, 자기나라의 정세에 부합되고 그 나라 인민에게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발전과 세계의 진보는 우선 각국의 건설과 혁명(개혁을 포함), 즉 기술혁명·문화혁명·사회제도의 혁명 등을 거쳐 실현되는 것이다. 그 건설과 혁명의 내용과 방식도 응당 그 나라의 정부와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어느 한 나라가 건설과 혁명을 수행할 때 타국은 그를 간섭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의 요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에게 자

형 산업을 후진그룹에게 양도하고 그 선진그룹은 더욱 더 고도적이며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이루어 지는데, 일본은 기묘하게 이 전환을 실시하여 아시아의 NICS와 ASEAN 각국에 그의 경제발전에 적용된 산업을 이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과정이 더욱 진행되어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이 끼치게 될 것이다.

이 ‘기러기행렬적 발전론’은 전후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국제분업의 한 면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기러기행렬적 발전’의 영향이 아시아 각 나라에 미쳐서 만약 동북아 경제협력이 이 ‘기러기행렬적 발전’의 모형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앞서기 문제이다. 동북아 경제발전에서 전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앞서고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중국 등 기타 국가가 그 뒤를 따르는 국면, 즉 소위 ‘기러기행렬적 발전’이 형성 되었다. 금후 상당한 기간동안 이 ‘기러기행렬적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간의 경제기술의 격차이기 때문에 이의 소멸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기러기행렬적 발전’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기술의 발전수준과 부유정도의 격차 및 동북아 경제발전과정상의 작용의 대소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발전의 속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본학자들이 ‘기러기행렬적 발전’을 주장하는 목적은 아시아 경제발전에서의 일본의 주도적 위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한 시기에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찬성하지만 만약 일본의 주도적 위치를 고정화시켜 다른 각국은 영원히 일본의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라면 이는 비과학적이며 역사발전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동북아 각국의 경제발전 상황을 보면 일본경제는 고속성장 이후 다시금 발전속도가 4~5%로 하강 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 속도의 차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을 앞설 수 있는 조건을 이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느 한 나라가 일본을 대신하여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뒤따라 가던 기러기가 앞서게 되고 따라가던 기러기가 가장 앞선 기러기가 되면 원래의 기러기행렬은 파괴되어 ‘기러기행렬적 발전’은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비록 ‘기러기행렬적 발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도 가장 앞선 국가가 모든 경제기술 면에서 모두 앞서는 것은 아니며 그외 뒤떨어진 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경제발전 수준과 일반산업기술 등의 방면에서는 앞선 지위에 있지만 우주기술과 한의, 한방약 및 기초과학 연구 등의 방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뒤떨어져 있다. 한 시기에 있어서 총체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으로 보면 선진과 후진의 구별이 있지만, 구체적 분야에서는 제각기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응당 각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반드시 남의 장점을 배워 자기의 단점을 보충해야 한다.

둘째, 국제분업 문제이다. 동북아 각국은 역사조건·자연조건·경제기술 발전수준·문화수준 등의 격차로 인하여 경제기술협력에서 일정한 국제분업이 형성되어 각국의 우세한 부분으로 상호 보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일 경제기술협력에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대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일본은 자본·생산기술·경영방법·인적자원·해외시장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분업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단기간내에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중·일 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식의 국제분업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영구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합리한 국제분업을 이용, 새롭고 합리적인 국제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기러기행렬적 발전’의 국제분업에 의하여 중국은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일본은 지식집약형 선진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나쁜 상황으로 되고 말 것이다. 이 기러기행렬적 발전식 국제분업의 영구화는 결국 경제적 종속관계를 조성하여 후진국 경제발전의 기형화를 가져옴으로써 영원히 경제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편으로는 실제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국제분업을 잘 이용하여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 창조하여 불합리한 국제분업을 될수록 빨리 없애고 합리적인 국제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호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Ⅲ. 소위 ‘공평’경쟁 문제

일본학자는 “앞으로의 중·일 산업협력에서 중국의 참여는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일부에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사소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경제원칙에 의한 무리가 없는 참여를 기대한다.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서나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력과 경쟁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경쟁의 기초위에서의 협력이며, 협력 조건하에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은 절대적이며 협력은 상대적이다. 상품경제의 국제사회에서는 상품경제의 운영 메카니즘과 법칙에 의하여 협력에 참가하는 성원들은 모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협력성원중에서 어느 한 성원의 최대의 이익은 다른 성원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실을 보게 될 지도 모르는 성원은 이를 피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경쟁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에서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한 성원은 모두 '공평'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공평'경쟁이란 각 성원간의 완전한 상품경제의 운영 메카니즘과 법칙에 의거, 어떤 비경제적 요소가 부가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각자의 국제경쟁력에 의한 상호경쟁이다. 이 '공평' 경쟁은 어떤 강국이 비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약소국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 보다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이런 '공평' 경쟁은 국제경쟁력이 강한 국가에 유리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가에는 불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협력에서 그 국제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공평' 경쟁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호정책을 반대하여 자기의 우세를 유지하려 함으로써 그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소위 '공평'경쟁은 실제상으로는 불공평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경제협력에 참가하는 각 성원이 경제기술발전과 실력, 국제경쟁력 등의 방면에서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유리한 지위에 있는 성원은 이익을 보며 불리한 지위에 처한 성원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제경제협력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협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한 나라들은 기본상 모두 보호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협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한 나라가 일정한 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국제상식이며 또 부인할 수 없는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협력에서 보호정책을 통하여 경제의 고속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룩하고 지금까지도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나라에 대하여 '공평'경쟁의 실시를 요구하며 보호정책의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참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경제협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한 나라는 ‘공평’경쟁 원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보호정책을 포함한 각종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제경제협력에서 보호와 협력은 병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경제협력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모두 자국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경제, 기술 발전의 수준과 실력 및 발전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와 정도가 다를 뿐이다. 이 차이가 국제경제협력의 기회와 조건을 이루어, 각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면으로 협력에 참가하며 또 협력을 통하여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제협력의 호혜평등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이 지역 각국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정에 모두 유리한 것이므로 이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성원국은 자기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후진국은 분발하여 자립갱생의 능력을 배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국의 장점을 배우고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약점을 될수록 빨리 극복하고 자기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국제경쟁력을 증강시켜 동북아 국제경제협력에 공헌해야 한다. 선진국은 경제·기술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후진국을 지원하여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더욱 큰 공헌을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협력은 주로 기업간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지만 기업은 경영체이므로 경영이익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업이 직접 후진국의 기업을 지원하기는 비교적 곤란하므로 마땅히 그 기업에 속해있는 국가를 통하여 실현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이익추구에 있어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출발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후진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호적인 것으로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선진국에 유리한 것이다.

IV. 세계적 협력과 지역적 협력

지금 세계에는 두가지 경제발전 추세, 즉 세계적 경제협력과 지역적 경제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전 지구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한 나라와 한 지역의 경제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각종 경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리적·역사적 조건으로 인한 각 지역의 특수한 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경제협력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경제권’ 즉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세계각국 경제의 국제화의 통일성에서 보면 지역적 경제협력은 세계적 경제협력을 위한 조성부분으로 이 두 협력을 서로 촉진시켜 각국 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지역적 경제협력을 세계적 경제협력과 대립시킨다면 각국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도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적 경제협력은 마땅히 모든 성원에 대하여 유리하게 호혜평등을 실현하여 서로 지원함으로써 공동 발전하여야 하며 비성원국에 대하여 배타적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그들의 이익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적 협력은 필요하며 또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역적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다른 지역과 나라에 대항해서 비성원국을 배척하여 개별적 성원국의 특수이익만을 추구 한다면 그것은 세계경제의 전 지구화 추세에 배치되는 것이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파괴하여 세계경제의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세계의 다극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적 경제협력을 ‘경제권’으로 한 차원 높여 어느 한 극의 세력범위가 된다면 그 결

과는 아주 나쁜 상황으로 될 것이며 세계가 사분오열되어 다극적 대립의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으며 이는 동북아 각국에게 모두 유리한 것이므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제분업에 의하여 자국의 우세를 발휘하고 남의 장점을 배워 자기의 단점을 보충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동북아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은 세계 경제의 발전과 전 지구화에 유리하다. 그것은 동북아 각국의 경제력과 국제협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역의 협력과 전 세계적 협력과의 관계를 조화시켜야 한다. 첫째, 이 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때에 다른 지역국가와의 협력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 지역의 협력을 위하여 채택한 정책과 조치가 다른 지역 국가의 권리와 이익에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셋째, 이 지역의 협력이 경제·정치·군사의 패권주의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국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

동북아 '경제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그의 필요성과 의의 및 내용은 '경제협력'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반드시 '경제권'을 형성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권'이 '경제협력'보다 특수하고 배타적인 것이며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인 동시에 발전도상의 국가로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을 견지하면서 4개항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기본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전방위적인 것으로 평화공존의 5개항 원칙의 기초위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세계상의 어떤 나

라, 어떤 지역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세력 범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현재에 있어서 패권을 부르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력이 발전된 장래에도 패권을 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술한 몇개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여 해결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토론내용

사회(민병용*) : 날씨는 덥지만 역사의 도시 연길에서, 특히 북한이 급변하는 전환기에 세계 각국에서 오신 통일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통일원과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낱말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가 한국일보 미주본사에서 근무할때인 1975년에 처음 들었던 태평양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아시아라는 말을 붙여서 아시아 태평양시대라고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이미 아세아 태평양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태평양시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정말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사는 하나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한·중·일·러의 관계, 그리고 남북한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전망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21세기에 동북아가 세계의 주역이 되고자하는 문턱에서 경제의 새로운 미래상을 열어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두분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네분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청석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대화를 폭넓게 나누어 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만에서 오신 오종운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오종운¹⁾: 먼저 냉전시대와 그 종말을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의 구소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그들은 공업 발전이나 기술수준 또 생활면에 있어서 아주 앞서고 풍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스레닌 혁명을 성공시켜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종주국으로서 미국을 견제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약 70~80년동안 지켜왔습니다만, 그들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의 실패였습니다. 또 복지를 추구하고 경제신장을 위해서 결국 그들의 이념을 뒤로하고 현실적 생존을 위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했다고 봅니다.

냉전시대의 국제 정세를 고찰해볼 때 그 당시에는 최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두 이념의 균형잡힌 틀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최강대국의 역할을 단독으로 맡아서 세계 온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일은 난관에 봉착했던 일도 있었고, 또 그걸 감당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두 초강대국이 견제하고 있었던 냉전시대가 오히려 균형이 맞았고 더 안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냉전시대 보다도 더 불안정하고 인류에 관한 문제들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지금 동북아의 경제 번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선을 견지해야 하겠는가? 현재 단독 초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동북아 내지는 태평양 지역 그 어느 나라에서 출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번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동

1) 대만, 성부촬영기업 부사장

북아 안보대화 기구'를 구성하는 창설제안을 하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이 참여할 수 있겠는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각 나라의 기본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 되지않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추구하며 여하히 구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집약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국력이 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사회질서가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할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므로서 이것들이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력이 부강하게 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배척을 하여야 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파업 내지는 학원 데모, 물론 이유가 있고 물론 할 말들이 있고, 또 반영을 시켜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는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고 국가 발전과 국익에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절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온국민이 합심해서 제재하고 삼가해 나갈 때 우리가 목표하는 경제발전은 이룩될 것이며,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국력이 신장했을때 동북아의 경제와 번영은 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 합니다.

사회 : 오충운 부사장께서는 세계 질서 수퍼파워의 재편성으로 불

안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런 태평양시대에 특히 태평양지역의 경제권이나 동북아 지역경제권을 형성해서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가 주역이 되고 특히 한국의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한국이 이 지역 번영의 기수가 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민간 아끼다지방본부 박헌일 단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박헌일²⁾: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발제하신 분들께 의문난 점 몇가지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조류는 블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경제공동체란 서로서로가 잘 살기위한 공동체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불신이 있어서는 이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도 정치문제를 다룰 때 특히 북한의 신뢰문제가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경제공동체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디만, 19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므로써 정치에 대한 새질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도 새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 냉전체제가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북아의 정치나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가 긴장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안정이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일본, 민단아끼다지방본부 단장

경제문제를 고찰해 볼 때,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가지 국제기구를 통하여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내정 간섭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많지 않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무엇을 내정간섭으로 보느냐'하는 것은 정확히 논의해 볼 문제이겠습니다만, 국제기구 또는 경제공동체를 만들 때는 무엇보다도 '공평, 공정, 평등'이 세가지 이념을 조화시켜서 기구를 만들어야지 이 셋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한다면 어느 국가는 이익을 보고 어느 국가는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 국교관계가 없을 때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협력을 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일본측 입장에서 보면 잘 해나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현순 교수님께서 내정불간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자국만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될 국제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내정간섭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지금은 어디에서나 많은 부분에서 상식화 될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르과이라운드의 농산물 수입·수출에 관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를 보면, 작년의 GNP가 23,000~24,000불 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세계 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약 7%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사람들이 지금부터 아무런 일을 안해도 일본의 GNP는 작년보다 7% 정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각국의 GNP만으로 각국의 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국민들이 다

른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을 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성은 금세기내에는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회 : 말씀의 요지는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불신감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나 정치공동체의 저해요소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국제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각국간의 공평, 공정, 평등의 문제를 잘 조화시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영국에서 오신 장민웅회장께서 경제공동체와 통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민웅³⁾ : 주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각론에서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각론은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저는 총론만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통일문제 토론회에도 참가하고 평화통일자문회의에도 참가 했었는데, 우리 통일도 예수재림과 마찬가지로 언제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통일 보험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통일비용을 약 3천억불로 추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계산 뿐이고, 어디에 적립해 놓은 것도 아니며 예산에 포함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걸 염출하려고 하면, 아무리 한국의 GNP가 7,000불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영국, 퍼모스트하우스 대표

또한 한반도가 분단된 책임은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강들의 싸움과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에 우리가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비용도 세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분단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통일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통일비용을 물게하자는 것이 제 발상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얼마를 내주는 것 같으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개에게 특정목적에만 주어라’고 하면 보험료가 아주 싸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비용이 수백억이 들지, 수조원이 들지 모르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기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통일보험에 전부 가입해서 통일보험기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만 내어도 보험금은 최소 천배내지 만배까지 받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같은 구상에 대해 어떤 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큰 축하할 일인데 어떻게 보험혜택이 해당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통일보다 더 큰 재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 갑자기 북한 주민이 몰려 들어오면 전부 나누어서 먹어야 되고 직장도 전부 나누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되기 전의 한국경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수도 없는 세월을 또 고생해야 되는데, 아무리 동족에도 좋지만 대책없는 통일은 고통 뿐입니다. 그러니 보험제도로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조용히 영국에서 부터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기금운동은 남한의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추진할

성질이 못되고 더더욱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먼저 힘을 합쳐서 시작하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봅니다. 즉, 자기힘으로 못하는 일은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보험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언제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각론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는 수십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무진들이 특히 로이드보험을 비롯한 유럽의 보험회사들과 동남아시아 보험회사들을 전부 알아보고 있고, 또 조직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통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실 분을 총재로 모시고 그 밑에 재단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게 할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한국에서도 집단이기주의를 아주 나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이기주의란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의 힘으로 총체적인 이익을 획득하여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때 집단 이기주의가 전혀 없다고 하면 발전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적은 집단이기주의는 큰 집단이기주의에 승복을 하는 집단이기주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족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며, 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북간 문제도 국가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양측이 체제 경쟁을 하다보니까 통일이 어려운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 집단이기주의에 입각한 통일운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민웅 회장님께서서는 우리의 통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한국통일보험기금’운동을 빌려서 통일에 대비하자고 색다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서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어느 교회나 장학재단이 혜택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통일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보험기금 마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연변대학의 이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동욱⁴⁾ :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신 두 교수님께서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상이한 측면에서 발언하므로서, 저는 금후 이 방면의 연구에서 편견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교수님의 논문이나 발표에서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인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 좀 더 깊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분의 견해상의 차이는 경제교류와 협력, 경제권, 경제공동체 이 세가지 개념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각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는 결국 교류와 협력으로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권, 경제공동체도 모두 경제교류와 협력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권은 경제교류협력보다 좀더 깊은 관계, 또 경제공동체는 경제권보다 좀 더 깊은 관계라고 구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교류와 협력을 동북아 여러 각국사이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으나

4)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교수

이미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발전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에 만족 할수 있는가? 그후에 발전가능성이 없는가? 라는 각도로 볼 때 저는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제블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만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동북아의 구성원이 손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여러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보다 좀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경제권 형성에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북아 각국 중에서 경제력이나 기술상으로 가장 강자는 일본입니다만, 일본은 과거에 주변국을 침략하였던 영예롭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는데는 아주 제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물론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현순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근년에 경제상에서 매우 큰 발전을 하고 또 매우 큰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경제발전을 너무 늦게 시작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기술수준으로서 여기에서 큰 작용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 본래의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이미 30년간 쌓은 경제발전의 경험으로서 좀더 크고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데 제일 큰 제약조건은 남북의 분열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숙원이며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통일이 필요한가? 특히 한국과 일본인론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빨리 되는가 늦게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점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얻겠는가? 무엇을 잃겠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통일이 아주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형식상에서 여러가지 여론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은 남과 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룩되리라고 봅니다. 완전히 평등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를 보게되면 분열되었던 나라들이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통일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금년에 발생한 남북예멘사이의 통일문제가 이미 이것을 사실로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했지만 끝내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통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적 통일은 꼭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에서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꼭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흡수통일이나 독일식통일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국적으로는 꼭 그런 형식으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려면 먼저 얻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 먼저 기여를 해야 중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좀더 너그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국민들이 좀더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역사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는 조만간에 꼭 정리되고 청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하에서 역사는 청산되어야 하며, 또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라고 말하는 것은 통일에 불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를 청산하는 일은 금후 통일된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후에 될 일을 너무 미리 말하면 오히려 그 일을 실현시키는데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장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은 왕왕 자기가 금후에 할 일을 먼저 말하는 약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더 너그럽게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 것과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북한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일체의 첫째 전제 조건으로 놓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많이 검토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핵은 없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통일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습니까?

6.25때는 상주 무기로서 한반도에서 300만~350만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상주 무기만 가지고서도 1,000만~2,000만명이 희생될 조건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하나 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두교수님의 발제와 네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플로어에 있는 전문가선생님들의 코멘트와 질문을 듣고 발제하신 두 교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 영국에서 오신 장민웅회장님께서 통일보험기금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먼저 발제를 하신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교수님 말씀가운데 남북이 좌우간 교류협력을 하는게 바람직하며, 또 이동욱 교수님도 다른것 따지지 말고 남북교류가운데서 경제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경제를 남한과 비슷하게 끌어 올릴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를 전공하신 김춘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교수님께서 “경제권이 생길 필요가 있겠는가? 따지고 보면 경제 대국에게 유리한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하면서 또 “인권이나 혹은 민주화”다 이런 저런 얘기하게 되면 기분나빠서 얘기가 안되니까 그냥 우리 하는데로 내버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제적인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누가 도와주거나 좀 올라갈수 있도록 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홍 : 아까 김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가운데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낙관적으로 보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제원리를 얘기한다면 무역에 있어서는 비교우위라든지 산업구조면에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역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개혁·개방 하기 위해서는 중국식을 배워야 한다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중국식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 국유화’로 바꿔나가고 있으며 자기체제에 어떠한 흠이 가거나 체제 붕괴를 유

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나 교류가 중국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와같이 북한이 경제를 오히려 고전적 공산주의 원칙으로 강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만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 및 교류를 하는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 장교수님께서서는 일본의 ‘기러기 행렬적 발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을 감정적으로 보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좋아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소위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선진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공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어떠한 논리에서 ‘기러기 행렬적 발전’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시아의 특징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또 생산양식이라든지 여러면에서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은 상당히 근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우리가 경제발전 할때도 서양적인 것 보다도 동양적인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앞세워서 그들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또 분업을 장려함으로써 기러식이 삼각형이라면 조금 더 벌려서 수평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점차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욱 교수님 코멘트속에서 지금 남쪽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제조건으로 못박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때는 “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러나 교류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조건으로해서 차단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경제교류를 계속해왔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불건을 사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북한에서 물건을 사오고자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북한에서 가져올 것이 없어서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한계점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다음 남북간의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지금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만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즉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태도가 명확해지고 그것이 남북간에 협상을 통해서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핵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북한으로 부터 초청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거 북한에 보내고, 또 과거에 김달현 부총리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초청되어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을 북한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북한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일체의 첫째 조건으로 놓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조금 다르고 이제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경제협력도 과감하게 시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병섭 : 지금 세계는 4대 경제블럭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EC는 프랑스가 주동하였고, ASEAN은 말레이시아가 했고, APEC은 우리 한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 경제블럭은 일본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북아 경제블럭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이 주도하도록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북한을 경제블럭에 동참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세 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하신 두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동욱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송 :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두가지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의 이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북의 분단은 사실상 2차대전후 미소 대결의 희생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미·소의 대결은 없어졌지만 통일이 되려면 주변 4개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본·미국과 수교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물론 북한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이것을 돕는 방향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동북아지역을 중개로 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하는 통일은 한쪽이 다른쪽을 흡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교류와 협력으로 서서히 통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협력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하여 서서히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가지만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동북아지역은 지금 경제공동체가 논의 중에 있으며 UN의 주도하에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쯤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자간의 협력보다 양자간의 협력이 주도하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경제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일본의 경제패

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 이지역을 침략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하루빨리 한반도가 통일 되어야만 이 지역의 경제가 균형 잡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북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의 경제힘력으로서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받아들이고 경제난을 면하면서 경제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동적 소유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북한에서는 자유무역특구를 설치하고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볼때 역시 서서히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도 역시 급속히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의 후유증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 : 장현순 교수님과 이동욱 교수님께서 코멘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제2분과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전망에 대한 두 교수님의 발제와 네분 선생님의 지정토론 그리고 방청석에서 참여해주신 세분 선생님의 좋은 코멘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경제발전에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세계의 또다른 21세기의 주역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각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온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부터 해결하면서 21세기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주역이 될 날이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주제발표자에게는 좋은 칭중이나 코멘트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분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 분과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제고 방안

발제/ I 유부웅(케냐, 성바울 연합신학대 교수)

II 김 환(일본, 한일문화연구소장)

토론/ 김달훈(대만, 한인교회 담임목사)
남해봉(카자흐공화국, 외국어출판사 한글판 주필)

문숙동(중국, 요녕민족출판사 사장 조리)

정영섭(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이장식(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 교수)

사회/ 유명옥(한국, 대한신학대 교수)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 제고 방안

유 부 응*

I. 역사의 기상도

“한반도는 인류역사의 용광로이며, 신의 실험실이다” (함석헌)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갈브레이스는 1977년에 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오늘의 시대현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 하다는 것 외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현대를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예일대학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도 『강대국의 흥망성쇠 : 21세기를 향한 준비』라는 책에서 똑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로 넘어 가는 역사의 과도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오늘의 상황이지만 다음 3가지만은 아주 분명해 지고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

둘째, 국제사회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셋째, 세계는 울타리가 없는 국제화시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점들이 오늘 역사의 기상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 케냐, 성바울연합신학대 교수, 한신대 및 동대학원·영국버밍햄대학원 졸업(교육학·철학박사), 계명대·한신대 강사역임

1. 이데올로기의 종말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데아(idea; 생각)와 로고스(logos; 말씀·이성)라는 두단어의 합성어이다. 이데올로기의 뜻은 인간의 지성을 극대화하여 인류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등을 개혁, 개선해 나가면 지상천국을 만들고 인류 황금시대를 열 수 있다는 신념이다. 여기에서 종교는 제외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19세기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시대는 20세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두가지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였다.

이 두 이데올로기의 긴장과 양극화의 극치가 20세기 역사의 모습이었고 그 극단적인 힘의 대결이 우리 한반도에서 실험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실패로 끝났음이 자명해졌다. 러시아 대통령 엘친은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공산주의는 망했다.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면 안된다”고 연설했다. 이로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김일성 사후의 북한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2. 새로운 질서의 시작

한 질서가 무너지면 새로운 질서가 정립될 때까지 당연히 혼돈과 공허의 중간시간이 있는 법이다. 인간지성의 극대화인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감정이 사람을 주관하게 된다. 인간의 집단적인 감정의 욕구가 민족주의, 부족주의, 혹은 종족주의 라는 형태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강대국들이 세계를 양분했을 때 그 질곡속에 신음하고 있던 제3세계 국가의 민족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계와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 복잡한 민족 구성원간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 소련도 15개 공화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다비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고 남쪽의 회교 6개 공화국도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엘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자기가 만일 실각하게 되면 러시아는 50개 국가로 핵분열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천년동안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세계가 이처럼 분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지역 및 경제적 이익에 따라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유럽 12개국이 통합하여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블록을 형성하는 구주연합(EU)을 형성했다. 북미주에서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합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을 맺고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 아시아지역에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6개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ASEAN자유무역지대(AFTA)를 출범시켰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오랫동안 흑백분리주의를 주장하던 남아프리카에서 40여년만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흑백이 공존하고 여러 부족들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되었다. 또 아프리카 국가연합기구(OAU)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 앙골라, 수단, 소말리아, 루안다 등은 최근까지 각 부족들의 상호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 1,500여개의 부족이 산재해 있는 아프리카는 아마 앞으로 100여개의 국가로 나뉘어 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헤쳐 모여!”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온 세계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김일성 사후 예상되는 변화조짐을 주의깊게 지켜 보고 있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성숙해 가는 발전 모습을 경이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국

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도 역시 한반도는 세계역사의 실험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국제화—울타리 없는 세계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국제화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불확실한 기대와 세계질서의 새로운 개편으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가 발가벗겨진 채 국제화라는 무대위에 세워진 시대상황으로 가고 있다. 세계는 국경개념의 울타리가 없어져 가는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것은 일찌기 이데올로기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단순한 무력이나 정치, 사상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 정보, 경영, 전문성, 지도력 등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라고 앨빈 토플러는 그의 최근 저서 『권력의 이동』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구시대 이데올로기의 청산도 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새롭게 밀려오는 국제화시대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 또 다른 역사의 실험실속에서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화는 19세기말 대원군의 쇄국정치 이후에 경험했던 강요된 개방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동적 시대감각에서 비롯된 신한국창조의 국민적 결의여야 할 것이다.

II. 한민족 역량의 대차대조표

“나는 한 성인의 소망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관용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울타리없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우리 자신의 역량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고, 동원가능

한 자원들을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영국의 저력은 개척정신과 의회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번영은 청교도정신과 실용주의에서, 독일의 도전은 탐구정신과 합리주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면 한민족의 역량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민족의 힘은 고난의 경험과 인내정신을 바탕으로 한 낙관적인 신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5000년 고난의 역사속에서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면서 그러나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오늘의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가꾸어 냈다. 비록 국토가 분단되고 반세기 동안 남북한이 무력으로 대치해 왔지만, 오늘처럼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뚜렷이 부각된 적이 언제 있었는가?

1. 새로운 국제환경과 정치

지금 세계는 초강대국의 정치력 시대에서 제3세계의 영향력 시대로 급변해 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제3세계 지도자들이 의장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등급 3(third ranking)의 세력이 아니라 2/3를 점하는 다수 세력으로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백인들의 독주시대가 가고 유색인종들의 활동시대가 온 것이다. 한민족은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소위 초강대국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를 한때 식민지화했던 일본에게 자제를 촉구할 수 있으며, 6.25 전쟁의 공모자였던 구소련과 중국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책임감을 충고할 수 있다. 또 지나간 냉전시대에 가까운 친구였던 미국에 대하여 태평양시대의 새로운 동반자로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제3세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우선 우리는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침략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했다. 굶주림의 시대가 있었고 전쟁을 겪었고 냉전의 희생물이었다. 따라서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아는 민족이다. 식민지경험, 독재정치,

학생혁명, 군사쿠데타, 군인정치, 민주화과정, 최근에는 근대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 빈부문제, 노사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 세계 각국이 겪고 있거나 곧 경험하게 될 거의 모든 과정들을 한꺼번에 홍역처럼 치르면서, 꿈의 올림픽을 환상적으로 이루어 낸 기적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이들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이들은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어한다.

우리들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발언에는 서구국가들이 가질 수 없는 설득력이 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 실려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경쟁력이며,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리더쉽이다. 한편으로는 세계의 도전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흑과 백, 동과 서, 남과 북의 첨예화한 인종, 정치, 경제 대결구도 속에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지구촌의 평화를 정착시켜 국제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국제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2. 해외동포

오늘날처럼 우리 해외동포들의 실체와 그 시대적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중국의 186만, 미국의 153만, 일본의 71만, CIS의 46만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500만 해외동포들의 활기찬 모습과 영향력은 우리민족의 국제사회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해외 전진기지이며, 버팀목임에 틀림없다. 비행기가 동체로만 날 수 없듯, 한반도 안에 제한되어 있는 한민족은 해외동포라는 날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세계를 가슴에 안고 힘차게 국제화시대를 향하여 응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단일민족(mono-ethnic) 이라는 민족적 자기동질성(national identity)을 바탕으로 하는 판코리아니즘(범한주의, Pan-Koreanism)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범슬라브주의(Pan-Slavism)나 범게르만주의(Pan-Germanism)와 비견할 수 있다. 혹은 기원전 7세기와 5세기에 앓시리아와 바빌론제국에게 패망하여 팔레스틴에서 지중해연안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유대인이 디아스포라(Diaspora;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로 연결되듯이 우리도 단군신화와 홍익사상을 연결고리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정치적 억압과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극적으로 흩어져야만 했고, 근래에는 앞날을 꿈꾸며 해외이민의 불을 타고 신천지로 진출했던 해외동포들은 이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서로 결집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 고리는 안으로는 상호 자극하고 통합할 수 있는 촉매성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고리를 혈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의 역동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전(統全)공동체 즉, 토탈커뮤니티(total community)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라는 자의식이다.

우리는 나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북에서도 이남에서도, 공산주의 질곡에서도 민주주의 실험실에서도 그 모진 고난을 딛고 역경을 헤쳐나와 지금 국제화의 도도한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미래의 주역이라는 신념이다. 사람은 고생을 함께 할 때 참 동지가 되고, 민족은 아픔과 설움을 공유할 때 내적 응집력이 생기고 고요한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해외 500만 동포는 우리민족이 고난을 극복해 낸 잠재력의 자화상이다. 이미 다양한 국제환경에서 시대를 앞질러 견고 있는 이들은 극명한 국제화시대의 성공적인 산 증인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붙잡아 매는 숙명의 고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래를 창조하는 풍요한 밑거름도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날개를 단 독수리가 되었다. 역으로 해외동포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뿌리를 찾은 안정감과 조국의 번영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3. 경 제

얼마전 어느 주간지가 요즘 재벌회장들은 무슨 책을 읽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재벌총수들이 금년들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리엔지니어링-기업혁명』으로 나타났다. 『리엔지니어링』은 마이클 해머와 제임스 챔피가 같이 쓴 책으로 “옛날 규칙을 집어 던져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 재벌 총수들은 새해벽두부터 이런 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을까? 한 기업총수는 “기업변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을 제로 베이스로 하여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당위성과 그 성공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오늘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년들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재도약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은 이미 상실됐고 기술력, 마케팅력 등 이를 대체할 만한 경쟁력 개발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한국의 총체적 국제경쟁력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마저 추월당하고 있다고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국의 유명 경제기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80년대 후반이래 사회전반에 만연한 집단이기주의와 기업의 활력상실 그리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근로자의 근로정신, 국민의 절제정신 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한국기업경제가 희생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국제화를 통해 세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길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해외지향을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을 늘리고 국제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경제 역량은 세계경영과 기술혁명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영을 지향할 때 필연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500만 해외동포들을 혈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라는 이중적 연결고리로 묶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세계경영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기술과 시장정보의 자원이 될 것이다. 역으로 해외동포들은 모국경제의 노하우를 현장에 효율적으로 이식하여 자기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한국경제는 해외동포들의 역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동기를 제공해야 하고, 역으로 해외동포들은 정체상태에 있는 한국경제에 도전적인 자극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한국경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재도약의 토대위에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국제화시대의 기업경제는 경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없는 자기개혁과 창의적 변신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국민과 사회지도층은 천박한 소비문화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무절제한 낭비와 총체적 해이, 긴장감없는 사회는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가 되기 때문이다.

4. 사회와 지도력

새 정부는 출발에서 부터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라는 4가지 국정지표를 천명했다. 이 가운데 세번째 ‘건강한 사회’는 나머지 세가지를 완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그 정도

가 심각할 만큼 불건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 증세를 고질적인 한국병이라고 진단해 왔다.

1898년 서재필, 이승만, 이상재, 윤치호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를 창설했을 때 이 모임에서 맨 먼저 내세운 표어는 한국이 제대로 되려면 한국병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치유되어야 할 한국병은 나태함, 거짓말, 남에게의 책임전가 등이었다.

왜 이러한 한국병이 생겼는가에 대한 의문은 일생동안 한국의 양반제도를 연구한 하버드대학의 와그너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910년에 인구가 1,100만이었던 한반도에서 40만명 밖에 안되는 소수의 양반들이 대다수의 평민과 천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으니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었고, 농작물 수확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빼앗기게 되니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 매를 맞기 때문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에드워드 와그너교수는 말한다. 이처럼 병들어 있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도산 안창호선생은 홍사단을, 춘원 이광수선생은 민족개조론을 부르짖기도 했다.

해방이후 급격한 변천을 겪어 오면서 결국 우리사회의 개혁은 정치나 경제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안으로부터의 혁명 즉, 인간혁명에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인간혁명은 곧 사고의 혁명-생각의 혁명을 말한다. 진정한 사고의 변화없이는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의 변화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역량은 그 사회의 지도자의 역량과 비례한다. 사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집단적 인격(co-operative personality)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리더십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지도자인가? 첫째, 능률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화와

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진취적인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네번째 내용은 국제화시대에 꼭 필요한 요건이다. 지도자에게는 혁신적 정신(innovation spirit)이 필요하다. 토인비는 이것을 도전적인 정신이라고 표현했다. 맥크래렌드는 성취동기라고 했다. 안창호선생은 전진적인 정신이라 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했다. 하젠은 창의적 성격, 리치호마는 생산적인 성격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혁신적인 정신, 적극적인 태도가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점차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사회참여의식이 높아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와 지도자들이 성숙해 가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Ⅲ. 끝맺는 말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각 민족과 국가들은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 속에서의 민족역량 제고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대응전략 중의 하나이다.

한민족의 역량을 분산, 약화시켜 왔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김일성사망으로 야기된 북한의 내적변화와 머지않은 장래의 통일조국을 내다 보면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지도력의 육성

1993년 1월호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

이 실려있다. “귀하께서 귀하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존경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하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소수에 속할 것 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도력의 위기(leadership crisis)를 경험하고 있다. 풍요한 경제력에 비해 지도력이 빈곤한 시대이다. 그 까닭은 지도력을 육성(leadership training)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지도력을 가르친 기관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사관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 30년동안 군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했다. 그들 외에는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에서는 졸업후 육군 소위가 되고 해군 소위가 되면 30~40명을 거느리도록 군인으로서의 정신력, 몸가짐, 통솔력을 훈련시킨다. 반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에는 문제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느라 대학졸업때 까지도 지도력에 대해서는 가르칠 엄두도 못내는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한다. 국제화시대에는 더 이상 지배자(ruler)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도자(leader)를 요구한다. 지배자는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요,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이다. 공산주의를 포함하여 지배자의 시대는 갔다. 민족역량을 제고시키고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한민족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때 민족의 역량이 결집될 것이다. 힘은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나온다.

독일의 경제학자 슈페터(J. S. Schumpeter)는 현대 지도자에게는 기업가적인 네가지 경영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셋째,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하고, 넷째,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경영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려면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솔

선수범해야 하며, 조직관리와 힘(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남북한과 전세계 해외동포들을 하나의 통전적 공동체(혈연-이익 공동체, total community)로 묶어내는 지도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이준열사는 일찌기 이런 말로 우리민족을 일깨웠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으니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찌어다”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그런데 야훼신은 그 꿈꾸던 땅이 손아래 바라보이는 언덕위에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종살이를 경험한 낡은 세대는 새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한다.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 국가를 건설한다. 우리는 민족을 통일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육성해야 한다.

2. 세계를 젊은이들의 교과서로 활용하자.

한민족의 역량은 내일을 사는 젊은이들의 비전에 비례한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민족의 운명은 달라진다.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내일’이라는 공동광장에 함께 모일 수는 없을까? 이 광장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 젊은이들이 격의없는 한가족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세계는 이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며, 한민족역사는 세계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온 세계는 젊음을 바쳐 인류의 미래를 보다 밝게 건설해 보려는 젊은 개척자들의 의지로 넘치고 있다. 미국은 평화봉사단 (Peace Corps)이라는 이름으로 1960년 부터, 영국은 해외자원봉사

단(Voluntary Service Overseas)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 부터, 일본은 해외협력자원단(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이라는 이름으로 1974년 부터 갓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미래의 예비지도자들을 뽑아 제3세계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 1년 혹은 2년간의 계약으로 영농, 의료, 교육, 각종기술, 지역사회개발, 경제계획수립 및 행정훈련 분야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의 이미지개선은 물론 자칫 현실과 유리되어 허영과 이상에 들뜨기 쉬운 자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오늘날 인류가 처한 가난과 냉엄한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지도자로서 세계적 견문과 시야를 넓히고 국제인으로서의 겸허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지구촌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배우도록 한다.

근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배낭을 메고 세계여행에 나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우리들의 내일'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인은 한민족 청년들의 범국제기구인 한국국제협력봉사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Volunteers)의 창설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정부와 해외지사를 가진 기업들이 공동투자하고 해외동포와 해외공관이 지도요원이 되어 남북한 및 해외동포 젊은이들을 각각 1명씩 3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전세계로 파견하면 좋을 것이다. 탁상공론의 토론으로는 남북한이 사상과 선입견을 서로 없애기 어렵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제3세계 현장에서 땀흘려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가 될 것이다. 민족의 긍지가 살아나고 통일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기구는 국내에 훈련센터를 두고 종합적인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제고 방안

김 환*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500만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역량제고 방안’을 제시하기란 필자에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재일동포의 활동 즉, 민족교육, 법적지위, 참정권운동, 결혼문제, 귀화문제, 통명사용문제, 경제문제, 통일문제 등에 국한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론 이 밖에도 다루어야 할 제반문제가 있지만 시간과 지면관계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재일한국·조선인이 일본에 정주하게 된 경위부터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현재 일본에는 <표 1>과 같이 70만명 가까운 한국·조선인이 살고 있다. 이 숫자는 해외에 이주한 한민족으로서는 중국의 190만, 미국의 140만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패전전 토지조사사업 등의 식민지정책과 강제연행 등에 의하여 일본에 오게 된 사람과 그 자손들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일본국내에는 230여만명의 한국·조선인이 있었다. 그들은 해방과 동시에 속속 귀국하여 다음해 3월 그 숫자는 140여만명에 이르렀다. 그후 귀국희망자가 점점 감소되어 1949년 4월 현재 약 60만명의 한국·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이들은 분단되고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남북통일에 기대를 걸고 일본에 정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 한일문화연구소장, 성균관대·국민대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나고야한국학교 교장, 나고야 유우코대학 강사 역임

< 표 1 >

연도별 재일외국인 등록인원 추이표

(매년 12월말 현재)

연도	등록인원 (전 체)	한국· 조선인	한국·조선인 점유비율(%)	연도	등록인원 (전 체)	한국· 조선인	한국·조선인 점유비율(%)
1947	639,358	598,507	93.61	1970	708,458	614,202	86.69
1948	648,045	601,772	92.85	1971	718,795	622,690	86.62
1949	645,749	597,561	92.53	1972	735,371	629,809	85.64
1950	598,696	544,903	91.01	1973	738,410	636,346	86.17
1951	621,993	560,700	90.14	1974	745,565	643,096	86.25
1952	593,955	535,065	90.08	1975	751,842	647,156	86.07
1953	619,890	556,084	89.70	1976	753,924	651,348	86.39
1954	619,963	556,239	89.72	1977	762,050	656,233	86.11
1955	641,482	577,682	90.05	1978	766,894	659,025	85.93
1956	638,050	575,287	90.16	1979	774,505	662,561	85.54
1957	667,036	601,769	90.21	1980	782,910	664,536	84.88
1958	676,983	611,085	90.26	1981	792,946	667,325	84.15
1959	686,613	619,096	90.16	1982	802,477	669,854	83.47
1960	650,516	581,257	89.35	1983	817,129	674,581	82.55
1961	640,395	567,452	88.60	1984	814,831	680,706	80.86
1962	645,043	569,360	88.26	1985	850,612	683,313	80.33
1963	652,038	573,906	88.01	1986	867,237	677,959	78.17
1964	659,789	578,545	87.68	1987	884,025	673,787	76.22
1965	665,989	583,537	87.61	1988	914,005	677,140	71.95
1966	668,318	585,278	87.57	1989	984,455	681,838	69.3
1967	676,144	591,345	87.45	1990	1,075,317	687,940	64.0
1968	685,075	598,076	87.30	1991	1,218,891	693,050	56.9
1969	697,504	607,315	87.06	1992	1,281,644	688,144	53.7

I. 민족교육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민족이 공존공영하는 국제사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에 해외에 거주하는 500만 한민족이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확고부동한 민족의식을 가지게 해야 될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가 국적상의 한국인일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재일동포사회가 민족운명공동체로서 일본이라는 이역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젊은 세대에게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민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민족교육은 동포사회의 존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긴급과제라고 하겠다.

현재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은 <표 2>와 같다. 이외에 정시제(야간) 한국학원, 한국교육원, 민족교육 50시간 의무제, 춘·하계 모국수학제도 및 장기 모국유학, 어린이 임해(臨海)·임간(林間)학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민족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젊은세대들의 민족의식 희박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족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 보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교육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오늘날 민족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중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있고 그것은 결코 현지 적응교육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주국사회에 기여·공헌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세계각국은 지금 2중언어(bilingual)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스리랑카, 중국, 그

<표 2>

재일한국인 자녀의 취학현황

(1988. 4. 1현재)

구 분	학 교 별	학 교 수	학 생 수	비율(%)
민단계학교	소 학 교	3	630	
	중 학 교	4	454	
	고 등 학 교	4	661	
	계	11	1,745	1.0
조총련계학 교	초 급 학 교	85	9,809	
	중 급 학 교	56	5,201	
	고 급 학 교	11	4,552	
	대 학 교	1	1,000	
	계	153	20,562	12.5
일 본 학 교	소 학 교	24,933	57,269	
	중 학 교	11,230	38,007	
	고 등 학 교	5,508	35,199	
	대 학 교	1,035	11,300	
	계	42,706	141,775	86.5
총	계	42,870	164,082	100

린랜드, 인도,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필리핀, 독립국가 연합, 영국, 호주 등에서 2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세계각지에 이주해 있는 화교 2,200만명, 유테계 1,500만명, 이탈리아계 550만명, 인도계 480만명, 팔레스타인계 250만명, 그리고 일본계 170만명 등은 모두 민족의식과 국가관에 있어서 거주국의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모국의 언어·역사 등 문화를 배워 '2중문화 지향'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500만 한민족도 역량제고 방법으로 무

엇보다도 먼저 민족교육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II. 법적지위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도 체결되어 재일 한국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써 일본에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주권이 부여된 것은 ① 해방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자 ② 그 직계비속으로 해방후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에서 출생한 자 ③ 앞 2항에 해당된 자로서 협정발효일인 1965년 1월 17일부터 5년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에 한한다고 했다. 또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의 영주권허가를 얻은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 한국인의 거주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협정발효일로부터 25년(즉 1991년 1월 16일)이 경과된 때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퇴거의 위협은 항상 있어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 자는 생활기반이 없는 곳으로 강제퇴거된다. 영주권은 취득했지만 출입국관리령 외국인등록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완화조치도 없었다.

협정 이후 국적으로 인한 각종차별, 민족교육 문제, 지문날인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일협정은 이에 대하여 결코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동포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1960년 이후 국적차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한 권익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문제화되어 일본 지식인과의 공동투쟁이라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재일한국인에 의한 민족차별 시정운동과는 별도로 인권옹호 운동의 세계적 조류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

쳤다. 일본정부의 배타적 외국인 차별정책에 대하여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맹렬히 일어났다.

재일동포 사회의 높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1991년 1월 10일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한·일 법적지위협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관한 각서』(이하 91년 각서라 함)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간소화한 수속으로 지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한다.

② 강제퇴거 사유는 내란·외환의 죄, 국교·외교상의 이익에 관계되는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한다.

③ 재입국 허가에 대하여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한다.

④ 지문날인에 대하여는 이에 대체되는 수단을 조속히 개발하여 이에 의하여 재일한국인 3세이하의 자손은 물론,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지문날인을 행하지 않도록 한다.

⑤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제도에 대하여는 동제도의 운용에 대하여 이후에도 재일한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식적·탄력적 운용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등의 민족전통 및 문화를 보존코자 하는 재일 한국인 사회의 희망을 이해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학교의 과외로서 행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일본정부는 배려한다.

이상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해결을 본 것도 소위 ‘인권후진국’인 일본을 상대로 한 교섭이었던 만큼 그 뒤에는 재일동포의 피나는 노력과 투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 또한 한민족 역량제고의 투쟁이었다.

Ⅲ. 참정권운동

일본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주민은 시·정·촌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도 1년 이상의 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떤 법률도 일본국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 헌법상에도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개념 속에 정주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법률에는 정주외국인을 주민으로서 도(都)·도(道)·부(府)·현(縣)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일한국인은 편견과 차별속에 일본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선거권 요구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민주사회인 일본에서 모든 정책의 결정이 한 명 한 명의 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재일한국인은 세금은 일본인과 같이 납부하면서도 일본정부로부터의 반대급부는 전혀 없다. 특히 의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미일광(長尾一纒)중앙대학 교수의 『외국인의 인권, 선거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보면 각급 지방의회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논문에는 일종의 자격기준으로서 ① 충분한 일본어능력 ② 적법하고 지속적인 상당기간의 정주 ③ 생활근거가 일본에 있을 것 등을 열거하고 유학생이나 상사원, 외국공관 근무자 등은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세계각국의 외국인 참정권의 추세를 살펴보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이 외국인에게 일정한 기간(짧은 나라는 6개월 : 예를들면 아일랜드, 긴 나라는 5년이상 : 예를들면 네덜란드) 체류

를 조건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재일동포의 참정권운동은 한민족 역량제고의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라 하겠다.

IV. 결혼문제

필자는 재일동포의 결혼문제를 논할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한 일본에서 출생성장한 재일동포끼리의 결혼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70만 가까운 재일동포라고는 하지만 일본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에서는 동포끼리의 접촉도 적고 일본인사회에 매몰되어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민족의식에 눈뜰 기회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동족과 만날 기회도 드문 현실에 있어서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이 근년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자연스런 추세라고도 하겠다.

해방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오늘날 <표 3>과 같이 현재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82.5%에 달하여 재일동포끼리의 결혼비율과는 4.9대 1로 일본인과의 결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남성의 일본여성과의 결혼이 전체의 22.8%인데 비하여, 한국여성의 일본남성과의 결혼은 전체의 59.7%에 달하여 한국여성의 일본남성과의 결혼이 남성의 그것보다 약 3배 가까이 많다. 이 경우 한국여성은 일본에 귀화하게 된다. 또 일본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에도 그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1984년까지는 일본국적법상 국적의 취득은 부계혈통주의였으나 1985년 1월 1일부터는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여성차별 철폐조약 비준의 전제로서 시행된 것이다. 이 신국적법 제2조, 제14조에 의하면 부 한국인, 모 일본인사이의 신

< 표 3 >

재일 한국·조선인의 혼인

(1991년 일본후생성통계)

년도	A남편 : 한국·조선인 처 : 일본인		B처 : 한국·조선인 남편 : 일본인		C 일본인과의 결혼합계		D 부부공히 한국·조선인		총 수		C대D의 비율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955	242	22.0	94	8.5	336	30.5	737	66.9	1,102		1 : 2.2	
1956	340	13.9	134	7.5	474	26.4	1,281	71.3	1,796		1 : 2.7	
1957	407	17.8	168	7.3	575	25.2	1,674	73.2	2,286		1 : 2.9	
1958	465	16.5	211	7.5	676	24.1	2,085	74.2	2,810		1 : 3.0	
1959	805	22.4	280	7.5	1,085	30.2	2,473	68.8	3,597		1 : 2.3	
1960	862	24.5	310	8.8	1,172	33.3	2,315	65.7	3,524		1 : 2.0	
1961	745	20.0	396	10.6	1,141	30.6	2,568	68.8	3,734		1 : 2.2	
1962	807	17.8	514	11.3	1,321	29.1	3,180	70.2	4,532		1 : 2.1	
1963	830	18.3	571	12.6	1,401	30.8	3,102	68.3	4,542		1 : 2.2	
1964	1,027	20.1	673	13.2	1,700	33.4	3,360	65.9	5,097		1 : 2.0	
1965	1,128	19.8	843	14.8	1,971	34.5	3,681	64.7	5,693		1 : 1.9	
1966	1,108	20.7	846	15.8	1,954	36.5	3,369	62.9	5,352		1 : 1.7	
1967	1,157	19.5	1,097	18.5	2,254	38.0	3,643	61.5	5,927		1 : 1.6	
1968	1,258	20.5	1,124	18.3	2,382	38.8	3,685	60.0	6,143		1 : 1.5	
1969	1,168	19.3	1,284	21.2	2,452	40.6	3,510	58.1	6,043		1 : 1.4	
1970	1,386	20.1	1,536	22.3	2,922	42.4	3,879	56.3	6,892		1 : 1.3	
1971	1,533	20.8	1,696	23.1	3,229	43.9	4,030	54.8	7,354		1 : 1.2	
1972	1,707	22.9	1,785	24.0	3,492	46.9	3,839	51.6	7,439		1 : 1.1	
1973	1,674	22.5	1,902	25.5	3,576	48.0	3,768	50.6	7,450		1 : 1.1	
1974	1,743	22.4	2,047	26.3	3,790	48.7	3,877	49.8	7,789		1 : 1.0	
1975	1,554	21.4	1,994	27.5	3,548	48.9	3,618	49.9	7,249		1 : 1.0	
1976	1,564	22.5	2,049	29.5	3,613	52.0	3,246	46.8	6,944		1.1 : 1	
1977	1,390	20.8	1,990	29.8	3,380	50.6	3,213	48.1	6,676		1.1 : 1	
1978	1,500	22.4	2,110	31.6	3,610	54.0	3,001	44.9	6,683		1.2 : 1	
1979	1,597	22.7	2,224	31.6	3,821	54.3	3,155	44.8	7,041		1.2 : 1	
1980	1,651	22.8	2,458	33.9	4,109	56.6	3,061	42.2	7,255		1.3 : 1	
1981	1,638	22.6	2,585	35.7	4,223	53.2	2,949	40.7	7,250		1.4 : 1	
1982	1,809	23.6	2,903	37.9	4,712	61.6	2,863	37.4	7,655		1.6 : 1	
1983	1,901	23.5	3,391	42.0	5,292	65.5	2,714	33.6	8,081		1.9 : 1	
1984	2,021	25.9	3,209	41.1	5,230	67.0	2,502	32.0	7,806		2.1 : 1	
1985	2,525	29.3	3,622	42.0	6,147	71.3	2,404	27.9	8,627		2.6 : 1	
1986	2,330	28.1	3,515	42.3	5,845	70.4	2,389	28.8	8,303		2.4 : 1	
1987	2,365	26.0	4,405	48.5	6,770	74.5	2,270	25.0	9,088		3.0 : 1	
1988	2,535	25.3	5,063	50.6	7,598	75.9	2,362	23.6	10,015		3.2 : 1	
1989	2,589	20.4	7,685	60.6	10,274	81.1	2,337	18.4	12,676		4.4 : 1	
1990	2,721	19.5	8,940	64.2	11,661	83.7	2,195	15.8	13,934		5.3 : 1	
1991	2,666	22.8	6,969	59.7	9,635	82.5	1,961	16.8	11,677		4.9 : 1	

생아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만 22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중 한·일 양쪽중 한쪽의 국적을 선택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대중의 민족의식이 희박한 이유도 있겠지만 생활편의상 유리한 일본국적을 선택하리라는 추측은 십분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인 처를 가진 동포의 수가 매년 2,700명 정도 늘어가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거의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화자수도 매년 6,000~7,000명씩 늘어가기 때문에 (일본법무성통계)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구는 신국적법 시행이후 매년 줄어가고 있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필자가 국제결혼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동족결혼만을 강조할 생각은 물론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과 같은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의 추세를 그대로 방관만 한다면 재일동포사회의 존속 그 자체가 대단히 위태로운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의 경우 민족적 자존심을 대등하게 인정하는 구미 다민족국가에 있어서의 국제결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본인들끼리는 사랑하는 사이라도 일반적으로 부모형제 등 주위의 반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 많다.

일본사회가 현재의 폐쇄성을 탈피하여 재일 한국·조선인을 일본 땅에 영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그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는 재일동포와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시기상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무튼 결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에 간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일동포의 결혼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이다. 피의 순수성이 없이는 한민족의 역량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다.

V. 귀화문제

제일동포의 귀화자 수가 <표 4>와 같이 증가일로에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표 4> 한국·조선인의 귀화자수

연도	허가자수	연도	허가자수
1952	232 (282) 82.3%	1973	5,769 (13,629) 42.3%
1953	1,326 (1,431) 92.7%	1974	3,973 (7,393) 53.7%
1954	2,435 (2,608) 93.4%	1975	6,323 (8,568) 73.8%
1955	2,434 (2,661) 91.5%	1976	3,951 (5,605) 70.5%
1956	2,290 (2,547) 89.9%	1977	4,261 (5,680) 75.0%
1957	2,312 (2,582) 89.5%	1978	5,362 (7,391) 72.5%
1958	2,246 (2,594) 86.6%	1979	4,701 (6,458) 72.8%
1959	2,737 (3,076) 90.0%	1980	5,987 (8,004) 74.8%
1960	3,763 (4,156) 90.6%	1981	6,829 (8,823) 77.4%
1961	2,710 (3,013) 89.9%	1982	6,521 (8,494) 76.8%
1962	3,222 (3,614) 89.2%	1983	5,532 (7,435) 74.4%
1963	3,558 (4,100) 86.8%	1984	4,608 (6,169) 74.7%
1964	4,632 (5,445) 85.1%	1985	5,040 (6,824) 73.9%
1965	3,438 (4,088) 84.1%	1986	5,110 (6,636) 77.0%
1966	3,816 (4,735) 80.6%	1987	4,882 (6,222) 78.5%
1967	3,391 (4,150) 81.7%	1988	4,595 (5,767) 79.7%
1968	3,194 (3,501) 91.2%	1989	4,759 (6,089) 78.2%
1969	1,889 (2,153) 87.7%	1990	5,216 (6,794) 76.8%
1970	4,646 (5,379) 86.4%	1991	5,665 (7,788) 72.7%
1971	2,874 (3,386) 84.9%	1992	7,244 (9,363) 77.4%
1972	4,983 (6,825) 73.0%	총 계	168,456 221,458 76.1%

* ()안의 숫자는 한국·조선인을 합한 전외국인의 귀화자총수임.

%는 한국·조선인의 비율임.

앞의 결혼문제에서도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일본의 신국적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 이후에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이면 그 사이의 신생아는 일본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귀화자 증가의 원인은 그것만은 아니다. 귀화자의 조직체인 『성화회』에 의하면 <표 5>와 같이 자손을 위하여 귀화했다고 하는 동기가 제일 많다.

<표 5> 성화회원의 귀화동기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① 사업상이 이유	42	30.7
② 정치적이유	5	3.6
③ 사회적이유(차별, 불이익)	30	21.9
④ 자손을 위하여	60	43.8
계	137	100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화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허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6>과 같이 최종적인 허가율은 귀화상담자수와 비교할 때 평균 50% 전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1992년까지의 귀화자 총계 약 17만명을 볼 때 귀화희망자는 그 2배인 34만명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약 70만 재일동포의 절반이 되는 셈이다.

귀화자수는 1992년에 처음으로 연간 7,000명선을 넘어 1993년에는 그 이상 증가했으리라고 예상된다.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그리고 <표 7>에서 볼 수 있듯 5%미만으로 추산되는 재일동포 1세의 생존율로 볼 때 앞으로 재일동포 젊은세대의 귀화자수는 한층 증가되리라고 예상된다.

<표 6> 재일 외국인의 귀화신청자와 허가율

연도	귀화상담자수 (A)	수 리 건 수 (B)	귀화허가자수 (C)	허가율(%) (C/B)
1954	5,152	4,347	2,608	60
1955	8,070	5,585	2,661	48
1956	9,639	5,756	2,547	44
1957	10,209	5,993	2,582	43
1958	12,924	5,990	2,594	43
1959	15,711	7,482	3,076	41
1960	14,442	8,130	4,156	51
1961	14,668	7,671	3,013	39
1962	14,565	8,297	3,614	43
1963	14,008	8,271	4,100	50
1964	13,934	8,759	5,445	62

출처 : 김영달, 「일본의 귀화행정」

<표 7> 재일 한국인의 세대간 점유율

연 도	1세비율(%)	2, 3세비율(%)
1975	27.6	72.4
1985	11.0	89.0
1990(추산)	7.0	93.0

* 1993년말 현재 1세의 비율은 5%

필자가 생각하건대 재일동포의 일본국적 취득(귀화)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어떻게 할 수 도 없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귀화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 금년 3월 24일 동경의 대전구립 동포(東蒲)소학교 졸업식에서 접수를 담당하기로 한 재일동포 윤조자 교사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직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동교 고전오랑(高畑伍朗) 교장이 일본국적을 가진 윤교사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졸업식에 나오는 것은 보기 거북하며 그러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대하여 윤교사가 복장까지 간섭받을 이유는 없다고 항의한 일이 있었다. (『통일일보』, 1994. 6. 11 보도)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여러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윤교사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이겠는데 귀화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필자가 여러가지 자료로 조사해보니 귀화허가를 받은 후 1985년 12월에 결성된 『민족명을 되찾는 모임』(일본 전국에 약 150명의 회원 보유)의 중심인물이 되어 법정투쟁을 통하여 민족명을 되찾은 사람이었다.(『동양경제일보』, 1986. 3. 7 보도)

윤교사가 민족명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졸업식에 나간 것은 자기의 출신을 밝히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동포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하겠다.

제반사정으로 부득이 일본에 귀화는 했더라도 민족명을 사용하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정정당당하고 의연하게 과시한 윤교사의 태도에 필자는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윤교사의 이와 같은 민족정체성 교수의 자세야 말로 한민족으로서의 역량을 전세계에 높일 수 있는 대전제라 하겠다.

VI. 통명 사용문제

통명이란 본명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말한다.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표 8>과 같이 80%에 가깝다.

<표 8> 통명 사용 여부

()안은 %

구 분	제6차 조사	제7차 조사	제8차 조사	총 계
쓰고 있다	102(91.9)	90(66.2)	272(78.1)	464(78.0)
안 쓴다	9(8.1)	46(33.8)	76(21.9)	131(22.0)
합 계(명)	111	136	348	595

통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표 9>와 같이 부모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57.7%였다.

<표 9> 통명을 쓰는 이유

()안은 %

이 유	제6차조사	제7차조사	제8차조사	총 계
부모가 사용하기 때문이다.	48 (63.1)	62 (67.4)	149 (53.0)	259 (57.7)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2 (2.6)	2 (2.2)	20 (7.1)	24 (5.3)
한국명을 쓰면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21 (27.6)	7 (7.6)	22 (7.8)	50 (11.1)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명 사용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5 (6.6)	21 (22.8)	90 (32.0)	116 (25.8)
합 계(명)	76	92	281	449

재일동포의 통명사용문제는 일본사회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필자가 모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끝마치고 나올 때 일본 이름을 가진 한 여학생이 뒤따라와 “선생님, 저도 한국사람 입니다”라고 하기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한 후 “네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친한 친구 몇명 외에는 모른다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여학생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 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 여학생의 용기없음을 책망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사회가 그녀로 하여금 본명을 쓸 수 없도록 하게 한 그 폐쇄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본명사용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민족 정체성의 표현이다. 본명사용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용기가 재일동포들에게 아쉽다.

한민족으로서의 역량제고도 본명사용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하겠다.

VII. 경제문제

재일동포의 경제활동은 일본사회의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1세대들은 그 역경을 극복하여 오늘날의 훌륭한 경제기반을 구축했고 2·3세대들은 이를 계승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생활의 자위수단으로 영세사업가들은 신용조합을 설립했다. 이리하여 재일한국인은 민족금융기관으로 대판상은(大阪商銀)을 비롯한 신용조합을 몇 지역에 설립했고 친목과 조합 운영상의 난국타개를 목적으로 1956년 6월 18일 경도상은(京都商銀)에 사무국을 두고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약칭 『한신협』)를 결성했다. 그 후 조합수가 증가됨에 따라 『한신협』은 미설립지역의 조합추진과 기존조합의 육성발전을 촉진하는 지도기관으로서

<표 10>

한신협·조신협 현황

(1993년도 결산시)

구 분	『한신협』 산하조합	『조신협』 산하조합
조합 수	35	38
점포 수	177	178
조합원수	211,311 (전년 211,557 : 0.12%감)	218,673 (전년 217,048 : 0.75증)
총예금고	2,714,921 (전년비 1.83%감)	2,474,169 (전년비 3.9%증)

(단위 : 100만엔)

의 역할을 했다. 그 후 협회사무국을 대판상은내로 옮겼다. 현재 제일한국신용조합의 수는 35개이고 점포수는 177개이다. 『한신협』(민단체)과 『조신협』(조총련계)의 실적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제일한국인 신용조합 육성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1960년 12월부터 8회에 걸쳐서 1억 달러의 저리대부를 실시하고 1989년 5월에도 3천만달러의 대부를 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협력은 제일동포 신용조합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이 민족금융기관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각지의 신용조합중 대판(大阪), 동경(東京), 경도(京都), 신호(神戶) 등 큰 조합은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20~30억엔의 예금고밖에 없는 영세조합은 운영이 곤란한 상태이다.

풍요한 제일동포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도 제일동포들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십분 발휘하여 모국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Ⅷ. 통일문제

단일민족인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제일동포 역시 정치적·이념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제일동포의 생활에도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더욱 곤란한 환경을 가져왔다. 분단의 고통은 고향

방문을 비롯하여 서신왕래까지도 불가능하게 했다. 재일동포는 조국이 분단된 채 우리말도 우리문화도 모르는 2~3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민단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그들은 <표11>과 같이 통일에 대하여 비관적이다.

<표 11> 『민단』학생대상 통일의식조사 결과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무응답	43	12.1
무관심	83	23.4
관심은 있으나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147	41.4
공산주의자와의 통일은 「년센스」이다	8	2.3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63	17.7
일본내에서 만이라도 남북 대립을 피하고 싶다	11	3.1
합 계	355	100.0

필자는 정상회담에 의하여 통일의 서광이 비쳐 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주석의 뜻밖의 사망으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새로운 김정일 정권과 한국정부의 화합으로 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한민족의 역량을 전세계에 드높일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IX. 맺 음 말

일본이 패전후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일관되게 취해 온 정책은 ① 한국·조선인을 일본으로부터 추방할 것(강제퇴거제도), ② 추방할 수

없으면 철저히 관리할 것(외국인 등록법, 지문날인 제도 등), ③ 관리하면서 민족의 혼을 빼앗을 것(동화교육) 등이었다.

그런데 1979년 일본국회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 승인함으로써 일본은 동 규약의 내용을 준수할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미 앞의 법적지위 부분에서 논한 1991년 각서에서 그때까지의 현안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는 물론 동포들의 노력과 투쟁의 소산이겠으나 동시에 국제화시대라는 시대적 큰 흐름에 인권 후진국인 일본이 소극적으로나마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본 사회속에서도 오늘날의 생활기반을 구축한 재일 동포들의 민족정신과 노력이야말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재일동포들의 역량이 세계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역량과 상호보완 발전해 나갈때 7천만 한민족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그 전도는 양양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閔寬植, 《在日韓國人の 現状お未來》, (白帝社, 1994, 東京)
- 朴榮順, <海外僑胞子女に對する二重言語教育の必要性さ促す>, 《愛民》,
(學校法人 愛知韓國學園, 1982, 名古屋)
- 裴大漢, <21世紀를 向한 僑民 後世教育의 指表>, 《第4回 海外韓民族代
表者會議 研究發表論文集》, (1993, 서울)
- 金 渙, <在日同胞の結婚問題お考える>, 《淡水會報, 第11號》, (淡水會,
1992, 名古屋)
- 金 渙, <國際化時代の民族教育>, 《「民族大學 名古屋教室」發表論文》,
(1993, 名古屋)
- 金 渙, <在日同胞の民族教育>, 《愛民》, (學校法人 愛知韓國學園, 1982,
名古屋)

■ 토론내용

사회(유영옥*) : 지금부터 제3주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달훈¹⁾ : 우리는 리더를 중시해야 합니다.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도 잘못은 많이 했지만 국민들은 지금도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덩소평을 최고의 실력자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후에 그의 동상을 끌고 다녔고, 장면 정권은 사회혼란으로 통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총살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백담사로 귀양을 갔으며 노태우대통령은 몰태우라고 비하하였으며 지금은 크게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린이들도 김영삼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국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를 무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리더를 잘 따르고 존경해야 합니다.

둘째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들이 합심단결하면 안되는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국민앞에 뚜렷한 민족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만이 한민족의 역량은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린다면 대만에 사는 천여명에 불과한 교민들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합심단결하여 교민 각각의 성금을 모아 콘테이너 하나 크기만한 큰 목각 호돌이 인형을 만들어 대만에서 전시·홍보하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치면 민족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한신학대교수, 단국대·한양대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1) 대만, 한인교회 담임목사

남해봉²⁾: 저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죽으려면 좀 빨리 죽든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카자흐공화국에 살면서 북한에서 온 관리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나해서 북한과 외부세계의 사정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었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저희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 “잘못 머리를 쳐들었다가는 머리가 열개, 백개라도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쳐들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개방되어야 된다,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에게 신문, 출판물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통일신보라는 신문인데 내용은 노동신문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뢰도당 등의 악랄한 욕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으로 두세번 편지를 썼습니다. “좀 신사적으로 하지 못하겠는가? 당신네도 한국에서 오는 신문을 보니까 알고 있겠지만 거기 어디에 ‘김일성 도당이요, 김일성 피뢰요’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왜 ‘도당이요, 피뢰요’하고 악담까지 하느냐? 좀 신사적으로 말하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편지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출판물도 딱 끊어버리고 이제 보내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이들은 결코 개방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북한의 내부에서도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2) 카자흐공화국, 외국어출판사 한글판 주필

만큼 이제는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투쟁이 전개 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투쟁이 하루 이틀내에 진행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진행될 것이며, 진행되면 자체 모순에 의해서 멀지않은 장래에 그 체제가 붕괴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가 두만강가에 가서 북한의 남양땅을 건너다 보았습니다만 제고향이 바로 거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제고향입니다. 저도 어제 기차소리를 들으면서 내 혼이라도 저 기차 소리에 실리면 고향땅에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 남해봉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숙동³⁾ :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로부터 한민족 역량제고 방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7천만 한민족의 한사람으로서 세계 지구촌 150여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세계속의 한민족 총람'이란 책을 만들어 전세계 지구촌의 동포사회에 널리 보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년 8월 15일이면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지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또한 피눈물 겨운 역사, 이러한 뿌리깊은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한반도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민족이 193만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동포 2-3세들은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와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에 7천만이라는

3) 중국, 요녕민족출판사 사장조리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지구 땅덩어리 어느 부분에 얼마나 살고 있으며, 그 분들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우수한 분들이 나왔고 그 분들이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내면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유부웅 교수님께서 세계를 젊은이들의 교과서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세계속의 한민족 총람’이란 책을 만들어서 이 역시 우리 젊은이들의 교과서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러면 비록 다른 민족들과 같이 살아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번영·발전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책을 만드는 것이 그 참 뜻을 담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사정은 현재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고도 직접 써 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가칭 세계속의 한민족 총람 발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여야 겠고, 이 책을 멋지게 만들자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 또는 어느 재단이나 협력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만들어서 세계 동포사회에 보내면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과 한민족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회 : 다음에는 몬트리올대의 정영섭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섭⁴⁾ : 유부웅 박사님께서 리더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달훈 목사님께서 리더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존경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존경하라고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시대에 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나라의 대통령을 얘기할 때 존경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듣고 자식들도 대통령을 존경할텐데 부모님 자신들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은 사관학교에서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이나 예술등 각분야에서 리더가 나와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정치적 리더십 하나만 가지고 나라가 발전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토요일만 문을 여는 민족교육·한글학교에서 18년간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단체 학생들이 민족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한단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설득시켜서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4)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북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TV, 만화를 보려고 정신없지,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모님들에게 민족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 중요성을 교육시켜서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이 한글을 공부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한국이 발전하고 커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일본에서도 한글교육·민족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선 자기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문화의 근원이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한글은 가르치지 않고 영어만 자꾸 배우게 했는데 요즈음 이민 오신분들은 한국말만 계속하기 때문에 발전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인권옹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권옹호는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것 보다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은 다 내고 투표권도 없이 사니까 리더되시는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원을 하여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외국사람과 결혼을 많이하느냐에 대해서 북미에서 조사한 결과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어머니의 지나온 과정을 반복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남자들에게 잘못이 있겠지요. 서양사람과 결혼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고생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 사는 우리들이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화를 하면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국내에 계신분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일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경제적으로만 통일문제에 접근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 문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유롭게 교류를 진행시키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2세 교육을 시키는데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에 관한 자료를 좀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아까 문숙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시면 2세들의 통일교육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선 선생님께서 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돈을 마련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항에서 우리가 이용세를 냅니다. 거기다가 기금을 조금 붙여서 돈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서 모인 돈은 한민족교육이나 통일 자료제작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사회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발제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케냐에서 오신 이장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장식⁵⁾ : 사람은 정치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고, 경제만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만이 이데올로기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데올로기시

5)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신학대 교수

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데올로기는 변화와 수정으로서 이어가고 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단주의니 혹은 지역주의니 하는 이런 불력의 식도 하나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고 그것이 변하거나 수정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치·경제 혹은 사회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것은 크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명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저는 문명의 비판의 입장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정경이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되어 있지만 좋은 이데올로기라도 정치가 그것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 많습니다. 어제 김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주의·마스주의가 이론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이론보다 훌륭할지 모르지요. 그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화 할 때 그 정치를 잘못해서 그 경제이념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그 자체 어떤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가 자기들이 내놓은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를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좋은 이데올로기를 시행착오로서 망쳐버린 일이 역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사상이든지 혹은 국제화라든지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여기에 건전한 문명의 철학이 없으면 오늘의 새로운 찬란한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것이 얼마 안가서 꼭 비판을 받고 붕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경제·사회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인간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오래가고 건전하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 것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self-love'입니다. 'selfish-love'가 아니고 'self-love'입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에서 강조한 것은 온당한 self-love를 무시하고 국가나 사회를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self-love가 희생되는 가운데서 국가, 사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연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절대로 selfish가 아니고 self-love인데 이 self-love를 희생시키고 사회·국가·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니 오늘날 공산주의가 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경제든지 건전하게 되려면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연의 원리는 역시 성서에서 말한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든지 신실하게 뿌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수확이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실패한 것은 노임없는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개인의 성취가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은 국유화 시켰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노동의 욕이 없어지지요. 앞으로 지역공동체 등 좋은 지역주의를 내놓더라도 거기에 개개 국가나 개개 민족의 self-love가 희생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개개 국가나 개개 민족의 self-achievement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말로와 같이 망하고 말 것이라는 하나의 철학적이며 문명 비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정치를 대단히 칭찬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선민족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소수민족의 self-love를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조선민족의 self-love와 self-achievem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연길같은 도시를 성장시킨 것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문명사회에 있어서 정치이념이든지 경제이념이든지 또 어떤 것이든지 이 두가지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원칙에 조화되지 않는한 그것은 문명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양상을 좀 압니다. 첫째 국제화는 케치프레이즈만 얘기하지 말고 국제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화 준비를 누가 어디서 하여야겠느냐? 정부는 못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학원사회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들은 국제사회에 진출할 인재를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 안 통합니다. 한국의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은 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10년 배워봐야 말한 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에 연구소가 많은데 서울대학이나 일부 우수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입니다.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운영할 힘이 없습니다. '산학협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슬로건입니다. 요즘은 기업이 자기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의 연구소는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국가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대학은 연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그것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일본의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경제를 비판했습니다. 왜 한국의 경제가 일본보다 뒤지느냐? 그것은 한국에는 KIST 등 여러가지 연구소에 고급 브레인들이 많이 있지만 고급 브레인들이 산업 현장의 노동자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구교수나 과학

자들이 산업현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산업과 학문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신분사회제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학자신분으로는 공장, 산업현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 산업화와 연구업무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요즈음 케냐에서 TV를 보면 외국의 상사들이 케냐의 개발을 돕는 인터뷰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일본의 외교관들이 지금 케냐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물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개발 이론을 TV에서 이야기하고 케냐의 산업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사들이나 한국의 외교관들이 하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도움을 줄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방면에 전문가가 우리 외국대사관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도 이익을 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외교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외교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고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일본청년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봅니다. 일본의 대사든지 대사관 직원들이 TV에 나와서 영어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유창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외교관들은 아주 빈약합니다. 이것은 비단 케냐뿐이 아니겠지요.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될 리가 없는 것이고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제고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를 대신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책임과 역량이 좀더 제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에 와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소자본을 가진 가발공장이나 가방공장과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대기업이 진출해 있긴합니다만 일본사람들을 보면 대기업도 아닌 많은 상사들이 나와서 케냐의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의 해외개발이 순전히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국제사회에 비쳐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화시대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출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expose)이지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사람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노출됩니다. 국제화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자신이 노출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기차나 비행기안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소주를 마시고, 장기·화투를 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런것이 노출이 될 때는 국제화시대에서 우리 한국은 뒤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화를 부르짖는 이마당에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재능과 기량과 자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야겠고, 국내에서 우리 내부의 노출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 이장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발제에 대하여 몇 분이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제의견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강대국의 정의를 군사적 논리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사적 논리 대신 경제적 논리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메이크 머니’(make money) 즉, 돈만 벌 수 있다면 민주주의 이념이든 공산주의 이념이든 전혀 관계없는 시대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엘친이 우리나라에 왜 왔습니까?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에 왜 왔습니까? ‘메이크 머니’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계 정세는 실용

주의 노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응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남이든 북이든 간에 정말 한민족 발전을 위하여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 자체를 최상수에 놓아야 합니다. 상수개념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 자체를 그 변수 개념으로 놓지 않고는 우리 통일은 요원하고 한민족발전도 대단히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발제자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웅 : 정영섭 교수님께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관학교만 지도자를 키웠는가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실례로서 강조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데올로기는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자체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환 : 정영섭 교수님 말씀중에 2세의 한글 교육·민족교육을 부모가 설득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있어서 부모가 설득을 많이 시키지요. 예를 들면 토요일학교라든지 수요학교를 보면 급수를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4개반으로 나눌 경우에 기초반에는 한국사람이 30명, 일본사람이 20명 이렇게 국적을 따지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급, 고급으로 진급 될수록 한국사람은 1~2명만 남고, 일본사람은 거의 다 남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하면 기초반에 들어오는 학생은 부모와 민단에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해서 온것인데 풀코스야 2년정도 되어서 그런지 나중에 보면 한국학생들은 거의 떨어지고 일본사람들은 무역을 한다든지 한국어를 한다든지 등으로 목적의식이 뚜렷

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부모가 민족교육에 아주 열성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캐나다에서는 한글 공부를 하면 학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 참 부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때 한글을 시험과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동경대학에 약간 있습니다. 외국어를 5분제중 2문제는 한국어로 해도 좋다는 것이 몇년전 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처럼 한글공부를 하면 학점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교육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거주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남의 탓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주국에서 민족교육을 권장하는 나라와 민족교육을 억제하고 동화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1년 각서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철저하게 동화교육을 시켰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민족성, 국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국학교를 건설한다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1965년 12월 문부성 국장의 통달문에 아주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주국의 민족교육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동포 자신들이 각성해서 자발적으로 민족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옹호문제, 피선거권문제도 정부보다 개인운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일동포들은 정부에만 일임하지 않고 재일동포사회의 학자나 사회단체가 운동을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정부의 뒷받침으로 1991년 각서와 같은 성과가 난 것입니다.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고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재일동포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동포여성이 일본남자와 결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어떠한가 하면 한국사람으로서 콤플렉스 열등감이 있으니까 일

본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사람과 국제결혼하는 것은 결코 선을 봐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자유결혼입니다. 주위에 일본 남자들이 많고 여러가지 주위환경, 역사적 흐름 등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귀화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일동포만큼 한국국적에 애착이 있는 재외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귀화도 부득이 하겠으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발제자 두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방청석에 계신 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구 : 김환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일본사람과 접촉을 할 때 절대로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 저는 일본말을 잘할 줄 압니다만 일본사람의 속성은 일본말을 쓰면 무시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면 일본사람들이 굴복하고 들어옵니다. 제 딸아이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선교하러 가면서 일본을 지나가는데 일본에서 느낀 것은 이 아이도 똑같습니다. “아빠 일본사람 이상하데요”, “왜”, “일본말을 쓰면 오히려 무시하고 영어를 써야 이야기가 되던데요”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일본에 사시는 재일동포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동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교육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재일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또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므로서 우리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더 존경받는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김환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사회자이신 유박사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민족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 1930년대에 나치스 독일이 독일민족을 최우수한 민족으로, 최상위의 민족으로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족문제는 상대적인 것인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을 최우위에 놓았을 때 다른 민족도 역시 최우위에 놓게 되는데 그때 충돌은 없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환 : 일본사람이란 영어로 회화를 하면 존경합니다. 일본말을 하면 존경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이라면 그저 평범하게 대하겠지요. 이것은 일본사람들은 평등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 보든지, 아래로 깔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약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강한 것이 일본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30년이고 50년이고 사는 우리 재일동포로서는 일상생활에서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전부가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일본어라는 것은 일상 상용어이고 일본에서 나서 일본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봐서는 모국어나 마찬가지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일동포에게는 일본어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우수성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 국제화시대에는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열등하다 해가지고는 국제화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란 이질문화를 서로 서로 인정해 주고 다민족이 공존공영하자는 것이지 우리 민족의 문화만이 우수하다, 또 어느 민족보다 우리가 더 우수하다거나 열등하다 해가지고는 공존공영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재일동포는 일본에 가서 한 두달 있다가 오는 나그네가 아니지요. 거기에 영주하고 정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민단의 이름을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류가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거류를 빼고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라고 합니다.

1972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는 의무적으로 민족교육을 받아야 된다”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50시간 받자. 우리 한글을 다 알고 애국가도 알고 역사도 알기 위해 ‘50시간 의무제 민족교육’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었습니다. 민족교육을 받지 않아도 취직하는데나 학교입학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으나 한국사람이라는 당위성은 있지 않느냐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의 조화이론으로서 50시간 민족교육을 창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20년전 일인데 그 당시에는 재일동포사회의 전역을 석권했습니다. 또 그안을 독일에 수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때 풍미를 하였지만 지금은 먹혀들지 않아요. 그 때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먹혀들었는데 지금은 그 당위성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민족들도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고 다 생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족자체를 상수개념으로 놓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김김정권’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써온 글에는 모두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김김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49년동안 거짓말로서 먹고 살아온 정권이 ‘김김정권’입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상대방을 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들은 우리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해방시켜야 할 지역, 이런 식으로 보아왔고,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괴뢰집단, 빨갱이 집단으로 보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한 내용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의 통일문제인데 통일을 위한 협상의 상대방을 빨갱이나 괴뢰집단, 미제국주의 앞잡이 이런 식으로 봐서 평화통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

다. 그런 맥락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민족을 이데올로기 이상의 최상수 개념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변하는 것이므로 그 밑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생각도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저는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상수개념으로 두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분의 발제와 다섯분의 토론 그리고 방청석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분과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제고방안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 합 토 론 내 용

■ 종합토론

사회(민병용*) : 제가 1988년 북한을 갔을 때 두 번 울고 왔습니다.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때 우리 분단과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번 운적이 있고, 모란봉지역의 어느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노래부르는 것을 보고 분단의 아픔이 아이들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되나하고 운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보이는 북한은 단지 김일성 사망이라는 것 외에는 별 변화가 없고, 북한 주민이 겪고있는 고통이나 오늘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문에 가서 두만강 너머로 북한의 남양시를 바라보면서 깊은 회한에 젖은 상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조금전 남해봉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통일의 그날 보다는 2천만 북한 주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먹고 입고 자는데 불행이 없는 사회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종합토론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주제발표를 하였던 여섯분의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미흡했던것,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과 다른 분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내용 등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방청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성호¹⁾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하나는 한반도에 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므로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신뢰성

* 한국일보사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을 제고하고 또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가지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5월 IAEA의 사찰을 받기 이전에 과연 핵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를 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한 일이 있느냐? 있다면 그 양은 얼마나? 그리고 그 플루토늄은 어디에 있느냐? 핵무기를 과연 제조했느냐 안했느냐? 북한에서 귀순한 강명도(강성산 총리의 사위)는 북한은 이미 5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북한이 1992년 5월 이전에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딱 두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IAEA에 신고하지 않은 두곳의 의심장소(영변에 있는 지하핵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2곳)를 IAEA사찰관들이 가서 사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994년 5월부터 북한이 8,010개의 연료봉을 꺼냈는데 그때 IAEA 사찰관들이 가서 원자로에 있는 노심 300개 정도를 잘 관찰을 하고 사찰을 하면 비파괴검사라는 기술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IAEA와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8,010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추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회담에서는 이 핵연료봉을 추가로 재처리 하지 않도록하고 제 3국으로 이것을 이전을 시켜 거기에서 재처리를 하는 방법이 논의될 것이고 북한의 핵투명이 제고되면 경수로 지원문제라든가 다른 관계개선 까지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영변의 50메가와트 원자로를 만들게 되고 96년에 가면 200메가와트 원자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료를 가동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1년에 4~5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7~8kg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2년동안만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92년도에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이미 1~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7~21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변에서 추출한 8,010개의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동결하는 것이 국제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성실하게 그들의 국제의무를 이행할 때 평화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김영훈²⁾ : 이번에 우리는 국제화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한반도의 통일화 문제를 다루어 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화 할려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큰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재료들은 아주 가치있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재료로 삼아서 앞으로 국제화, 통일화, 동북아시아화 하는 작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어떤 아라비아 부자가 “청색말을 하나 구해오는 사람은 1억불을 주겠다” 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영국사람은 청색말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장비를 준비하는 일을 했고, 독일 사람은 정말 청색말이 있는가 하고 도서관을 뒤지는 일을 했고, 불란서 사람들은 그런 말은 없으니까 백말에다가 푸른 물을 감쪽

2) 미국, 미 안보협의회 한국안보문제연구팀장

같이 염색하면 좋겠다고 했고,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아니고 털을 하나씩 뽑고 푸른털을 심어서 감쪽 같이 청색말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그 광고를 오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 친구를 불러서 “오늘 내가 1억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 한잔먹자”하고서 외상으로 한 잔을 잘 먹었다는데, 이것이 민족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회색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영국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들이고, 독일사람들은 연구하는 연구자, 불란서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일본사람들은 모방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사람들은 허세에 들떠 있는 사람들 이라는 뜻 입니다.

이 허세 키우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부자가 아니면서도 부자인척 하는 것, 금방 뒤통이 부산떠는 것, 허세부리는 이런것 좀 지양하면서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잘 알려고 노력하고 북한과 함께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착실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송³⁾ :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을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사업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사업을 완성하는데는 물론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주변 4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몇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접촉한 한국 학자들 중 적지않은 수가 중국이 과연 남북의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더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분들의 추측은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영토를 요구 할까봐 중국이 한반

3) 중국, 후퉁강대 교수

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북이나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 영향이 있을까봐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과 얘기 할 때, “중국은 남북의 통일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는가하면 첫번째 이유는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대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국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때 남북이 통일만 된다면 이 지역의 안정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중국의 실익으로 볼적에 개혁·개방이전에 중국은 북조선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거래가 많았습니다. 북은 원자재를 팔고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사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북한의 거래는 많이 줄었고 실익도 과거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북의 경제가 심각한 정도로 곤란할 적에 과거에는 김일성이나 혹은 북의 총리가 왔다가면 그래도 적지 않은 원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만 된다면 남의 뒷받침으로서 북의 경제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방면에 있어서 중국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우리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상으로 가장 유력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를 침략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 기술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또 중국이 발전한다면 일본의 세력팽창과 패권 주의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각도로 볼 때 저의 생각에 중국은 남북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일부학자들의 의견과 다른데, 미국은 남북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또 이런 형편에서 미국은 무기를 팔 수 있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군대가 전부 철수해야 되고 무기도 팔 수 없게 되므로 미국이 경제적 이익에 관계 되기 때문에 내심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현순⁴⁾ :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하면서 한국과 외교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한국기업에 대해서 일본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큰 희망을 품었는데 실제상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타산을 너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기업의 위신이 중국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대외투자과 무역이 잘 안될 때는 한국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해타산을 좀 적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웅⁵⁾ : 우리 자신의 사고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새로운 용어중에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의식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남쪽에서는 북쪽을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에 의해서 강점된, 또 북쪽에서는 남쪽을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되었다고 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말고 우리는 어느편에 있든지간에 우리는 다 고난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공통분모위에 서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상도라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4) 중국, 대련 일본경제연구소 소장

5) 케냐, 성바울연합신학대 교수

제가 10여년동안 여러나라를 방문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지도력의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가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스타일의 리더십은 가고 민주주의 사회도 매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마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의 경쟁은 경제경쟁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도력의 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남북한이 소위 집단 인격공동체를 형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익공동체와 혈연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통일공동체 전에 먼저 통전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한국국제협력봉사단'의 창설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북한출신의 기술자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각 지역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도 많이 나와있는데 이사람들과 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제 3자가 한 팀이 되어서 국제협력봉사를 하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나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미래지도자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 환⁶⁾ : 일본에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장기간 살다 귀국하면 그 자녀는 학교쇼크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그 아이들에 대한 특별지침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우리 동포들이 수백명 살고있는 지역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위한 특별교육 지침서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묵살하고 일본인으로 동화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6) 일본, 한일문화연구소장

그래서 우리는 10여년전부터 한국인 교육지침서를 내달라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오오사까, 교도, 나라 등 여러군데에서는 이 지침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고야 같은데는 3대도시중 하나인데도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신문에 기고 하는 등 여론을 환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 제일 한국인들은 공무원이나 국공립대학 교수도 될 수 없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도 귀화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안준다는 것 등 국적차별이 심했는데 이것도 오랜 투쟁을 해가지고 김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제1호로 개업을 하였고, 지금은 변호사 몇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있고, 사립과 국공립대학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를 모두 합치면 2~3백명,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정권문제는 민단 단장이 지난 봄에 바뀌었는데 “참정권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나서서 일본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건의서를 냈고, 신문과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호응을 해주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데, 그러나 이것이 언제쯤 성취되리라는 것은 낙관을 불허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명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명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결의하고 우리 지식인들이 본명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협조를 하는데 오히려 부형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본이름을 쓰고 있어서 친구들이 일본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모르는데 왜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하느냐? 한국이름을 쓰도록 하니까 우리가 아주 난처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본이름을 그대로 쓰도록 해달라”는 항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동포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사 회 : 지금까지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1994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역사적인 고난의 땅, 독립 운동의 투혼이 깃들어 있는 땅, 새로운 미래의 땅인 연길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깊은 감격이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발제자 선생님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통일원, 또 이런 좋은 자리를 제공해주신 연변 과학기술 대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볼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94 한민족통일문제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4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결과보고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1994년 12월 26일 인쇄

199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교육홍보국
(전화 720-2422)

인쇄처 문성인쇄주식회사

<비매품>